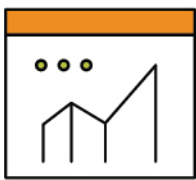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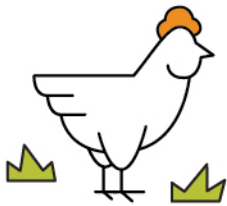

한국 산란계 업주의 케이지프리 전환을 위한 팔로우업 연구조사



한국 산란계 업주의 케이지프리 전환을 위한 팔로우업 연구조사

Follow-Up research for the Transition Battery-Cage
to Cage-free laying hen farming in Korea

2023. 12.



This research i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Open Philanthropy.

이 조사는 오픈 필안트로피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 대표 조희경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혜원
연구원	박아름
연구원	김성남
연구원	조한슬

<차례>

1. 서론	1
가.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나. 연구방법	3
1) 설문조사	3
2) 포커스그룹인터뷰	5
2. 설문조사 결과	7
가. 응답자 특성	7
나. 농장 운영 현황	8
1) 지역적 분포	8
2) 케이지 특성 및 사육두수	12
3) 생산 및 유통 관련	19
4) 영업 계기 및 지속 관련	25
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입장	31
1) 동물복지농장 운영 여부	31
2)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생각	33
3) 동물복지농장 전망에 대한 생각	34
4) 동물복지농장 전환에 대한 생각	37
라. 2025년 사육면적 확대 관련 입장	39
1) 2025년 사육면적 확대 관련 예상	39
2)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H형)로 전환하려는 경우	49
3) 평사실내사육 등 동물복지인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54
4) 영업 승계 혹은 폐업하려는 경우	60
마.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63
1) 대한산란계협회 임원 인터뷰	63
2)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 포천지부	64

바. 소결	64
3. 결론 및 제언	69
가. 케이지프리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69
1) 케이지사육의 단계적 금지	71
가) 케이지사육 신규 진입 및 증설 금지	71
나) 케이지사육 달걀 수입.판매.유통 금지	71
2)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 지원	72
3) 사육환경표시제 기준 및 홍보 강화	73
4)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련 정책 정비	74
5) 관련 연구 진행	74
나. 케이지프리 전환 촉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	74
1) 시민(소비자)의 의식적, 윤리적, 정치적 소비	74
2) 시민단체의 캠페인	75
다. 케이지프리 전환 촉진을 위한 업계의 노력	75
4. 참고문헌	77
가. 국내문헌	77
나. 해외문헌	78

<표 목차>

[표 1-1] 설문조사대상, 방법, 주요내용	4
[표 1-2] 설문조사 설계	5
[표 1-3] 포커스그룹인터뷰	6
[표 2-1] 조사항목별 응답자 특성	7
[표 2-2] 지역별 농장 현황 응답	8
[표 2-3] 2023년 2분기 전국 지역별 농장 현황	9
[표 2-4] 가축사육제한구역 여부	11
[표 2-5] 케이지 유형 및 기준 사육밀도	12
[표 2-6] 사육밀도 준수 여부	13
[표 2-7] 농장주별 입식 가능 두수 및 입식 두수	14
[표 2-8] 총 사육두수 및 평균 사육두수	15
[표 2-9] A형 농장 사육두수 및 평균 사육두수	15
[표 2-10] 케이지의 설치 시기와 교체 주기	16
[표 2-11] A형 케이지 농장주의 설치 시기 및 교체 주기 응답	17
[표 2-12] 케이지 제작업체	19
[표 2-13] 산란율 및 일일생산량 평균값	20
[표 2-14] 산란율 및 일일생산량	20
[표 2-15] 출하 횟수 및 출하 규모 평균값	21
[표 2-16] 출하 횟수 및 회당 출하 규모	22
[표 2-17] 주 판로	23
[표 2-18] 거래 유통업체 수 평균값	24
[표 2-19] 현재 난당 가격 및 희망 가격 평균값	24
[표 2-20] 영업 계기	25
[표 2-21] 농장 운영 기간 및 향후 운영 예상 기간	26
[표 2-22] A형 케이지 농장주의 농장 운영 기간 및 향후 운영 예상 기간	27
[표 2-23] 승계 계획 여부 및 미계획 시의 이유	28

[표 2-24] A형 케이지 농장주의 승계 계획 여부 및 미계획 시의 이유	29
[표 2-25] 산란계 산업의 지속을 위한 농장의 최소 연소득 평균값	31
[표 2-26] 동물복지농장 운영 여부	31
[표 2-27] 산란계 관련 운영 방식 및 고충	32
[표 2-28] 진행 및 관찰되는 기존 산란계 축산업 관행의 전체 응답자 대비 비율	33
[표 2-29]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를 체감도 및 공감도 평균값	33
[표 2-30] 향후 동물복지농장의 수 및 사육수 비율 변화 예상	34
[표 2-31] 동물복지농장 비율이 늘어나거나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	36
[표 2-32] 동물복지 농장 전환 시 예상 초기 시설비용 평균값	37
[표 2-33] 동물복지란 적정가격 평균값	38
[표 2-34] 업계 변화 요인 관련 어려움	38
[표 2-35] 2025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한 인지 여부	39
[표 2-36]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요구되는 조치	40
[표 2-37]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육두수	41
[표 2-38]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생산원가	42
[표 2-39] 2025년 사육면적 확대 시 출하 횟수 변동 여부	43
[표 2-40] 2025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43
[표 2-41] 2025년 사육면적 확대의 장기적 영향	44
[표 2-42] 2025년 예상되는 산란업계 상황	45
[표 2-43] 2025년 사육면적 확대 불응 시의 상황에 대한 예상	46
[표 2-44] 2025년 직립식(H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 여부	47
[표 2-45] 2025년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 여부	48
[표 2-46] 직립식 케이지를 선택하는 이유	50
[표 2-47] 향후 동물복지인증 농장 전환 고려 가능성	51
[표 2-48] 향후 동물복지인증 의무화 가능성	52
[표 2-49] 추후 동물복지 전환 고려를 위해 필요한 지원 순위	53

[표 2-50] 동물복지농장 전환 예정 시기	54
[표 2-51] 전환하고자 하는 동물복지농장 방식	56
[표 2-52] 동물복지농장 전환 결심 이유	57
[표 2-53] 동물복지농장 전환 시 예상되는 어려움	58
[표 2-54] 동물복지 전환 시 필요한 지원 순위	60
[표 2-55] 영업의 승계 혹은 폐업 고려 이유	61
[표 2-56] '연령상 은퇴할 나이' 연령 평균값	61
[표 2-57] 폐업하지 않고 혹은 승계 시 동물복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 순위	62

<그림 목차>

[그림 2-1] 성별 분포	8
[그림 2-2] 연령 분포	8
[그림 2-3] 농장 위치 응답	10
[그림 2-4] 전국 농장 수	10
[그림 2-5] 가축사육제한구역 여부	11
[그림 2-6] 케이지 유형 및 기준 사육밀도	12
[그림 2-7] 사육밀도 준수 여부	13
[그림 2-8] 입식 가능 두수와 입식 두수 및 사육 두수 합계	14
[그림 2-9] 케이지의 설치 시기	17
[그림 2-10] 케이지 최근 교체 시기	17
[그림 2-11] 수입 케이지 제작업체	19
[그림 2-12] 산란율	21
[그림 2-13] 일일생산량	21
[그림 2-14] 출하 횟수	23
[그림 2-15] 회당 출하 규모	23
[그림 2-16] 주 판로	24
[그림 2-17] 영업 계기	25
[그림 2-18] 농장 운영 기간	27
[그림 2-19] 향후 운영 예상 기간	27
[그림 2-20] 승계 계획 여부	30
[그림 2-21] 승계 미계획 시의 이유	30
[그림 2-22] 동물복지농장 운영 여부	32
[그림 2-23]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를 체감하는 정도 및 그에 대한 공감 정도	34
[그림 2-24] 동물복지 농장수 변화 예상	35
[그림 2-25] 동물복지 농장 사육수 변화 예상	35
[그림 2-26] 동물복지농장이 늘어난다고 생각한 이유	36

[그림 2-27] 동물복지농장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	37
[그림 2-28] 업계 변화 요인 관련 어려움	38
[그림 2-29] 2025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한 인지 여부	39
[그림 2-30]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요구되는 조치	40
[그림 2-31]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육두수	41
[그림 2-32]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생산원가	42
[그림 2-33]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44
[그림 2-34] 2025년 사육면적 확대의 장기적 영향	45
[그림 2-35] 2025년 예상되는 산란업계 상황	46
[그림 2-36] 2025년 사육면적 확대 불응 시의 상황에 대한 예상	47
[그림 2-37] 2025년 직립식(H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 여부	48
[그림 2-38] 2025년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 여부	49
[그림 2-39] 직립식 케이지를 선택하는 이유	51
[그림 2-40] 향후 동물복지인증 농장 전환 고려 가능성	52
[그림 2-41] 향후 동물복지인증 의무화 가능성	53
[그림 2-42] 동물복지농장 전환 예정 시기	55
[그림 2-43] 전환하고자 하는 동물복지농장 방식	56
[그림 2-44] 동물복지농장 전환 결심 이유	57
[그림 2-45] 동물복지농장 전환 시 예상되는 어려움	59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산란계 농장주를 대상으로 배터리케이지의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한국 내 산란계 양계업의 케이지프리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유럽에서 배터리케이지가 금지된 2012년, 한국에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은 매우 더딘 편이다. 뿐만 아니라, 공장식 축산은 유전적 단일성, 항생제 잔류물, 유전자조작유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사료 급여, 질병(전염병 등) 관리 미비, 비위생 등 여러 식품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며, 이러한 문제의 기저에 자리하는 동물복지 훼손 및 동물학대, 토양에 대한 착취로 인한 환경오염, 수질 오염, 온실가스(메탄가스 등) 배출 등 심각한 생태적 및 환경적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한국은 연간 닭고기 소비량이 10억마리에 달하며, 양계의 상당수는 날개 한번 제대로 펼치기 힘든 환경에서 고통받는다. 육계는 약 30일간 실내 평사에서 뻥뻥하게 밀집 사육되다가 정해진 몸무게에 이르면 짧은 생을 마감하고, 산란계 암탉의 경우 주로 배터리케이지에서 약 1년간 달걀을 낳다가 70~72주(490~510일)령에 산란율이 저하되면 도계축되고 있다.¹⁾
-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축산물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한국에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2012년 3월)와 달걀의 사육환경 표시제(2018년 8월)가 도입되었으나, 2023년 6월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2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동물복지인증 산란계 농가는 23.8%(223곳), 사육두수는 약 6.1%에 그치고 있다.²⁾
- 케이지프리로의 전환은 동물복지를 제고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축산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감소시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회복시키며, 인간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더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2023년 1월 발간한 ‘농업전망 2023’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가능량은 15.1kg, 1인당 달걀 소비가능량은 13.8kg(56g 대란 기준 246개)이다.

2) ‘2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2023.06.13.
<https://www.qia.go.kr/downloadwebQiaCom.do?id=44561>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육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및 구매 행동 변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케이지를 사용하는 농장들이 케이지프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조류독감(Avian Influenza, 이하 AI)으로 대규모 살처분이 반복됨에 인하여 심각한 동물학대, 다른 종과의 조화 및 유대감 파괴 문제가 발생하며, 경기도에서만 12년간(2006~2017년) 2,176억원의 비용을 소요할 만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생조류의 유입, 국제교류 및 주변 조류독감(AI) 상시 발생국들과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 한국 내로의 조류독감(AI)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케이지프리 와 같은 동물복지형 사육 방식으로의 변화는 효율적 집단방역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³⁾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케이지프리 전환을 위한 모든 노력은 크나큰 현재적 가치를 지니며, 특히 2023년도에 8.8조를 넘어선 국내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집행에서 케이지프리 관련 지원을 편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케이지프리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⁴⁾
- 특히 2025년 9월 산란계 사육면적이 0.05m²/마리에서 0.075m²/마리로 확대 예정인 상황에서 일부 A형 농장주들은 현재 강한 저항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2021년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실현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에 A형 농장주의 입장을 청취하고 사육면적 확대에 대한 산란계 농장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2025년 다수 산란계 농장주는 사육면적 확대에 저항하며 유예 기한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2025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산란계 농장들, 특히 A형 농장이 일명 ‘현대화’를 통해 배터리 케이지 사육방식을 유지하게 될지, 동물복지농장 전환으로의 첫걸음을 떼게 될지, 또한 동물복지농장 전환 촉진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이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 이 조사의 결과는 정부가 A형 농장과 같이 2025년 9월 사육면적 확대 조치로 영업 양식의 대규모 변화를 겪어야 하는 산란계 농장들로 하여금 보다 지속가능하고, 기후적응적이며, 미

3)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은환 외, 경기연구원, 2017.09.
<https://www.gri.re.kr/web/contents/resreport.do?schM=view&schPrjType=ALL&schProjectNo=5456&schBookResultNo=8521>

4)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현황, 김문석, 2023.01.30.
https://www.mafra.go.kr/sn3hcv_v2023/skin/doc.html?fn=BE1731F9-2BD6-ECFA-6F94-DBE75B3FBF82.xlsx&rs=/sn3hcv_v2023/atcmmnfl/bbs/202311/

래지향적인 케이지프리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나. 연구방법

1) 설문조사

-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산란계협회의 회원으로서 전국산란인대회에 참석한 산란계 업주를 대상으로, A형 케이지 운영 현황과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및 2025년 사육면적 확대 관련 입장을 조사함으로써, 2025년의 제도 변화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책 포인트를 도출하고, 한국 산란계 양계업의 케이지프리 전환을 촉진 및 지원하는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계획되었다.
-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21년에 진행된 설문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2025년 사육면적 확대 관련 질문을 추가하여 작성한 초안에 대한 대한산란계협회 임원 및 A형 농장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 설문조사의 내용은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산란계 농장 운영 현황, 업계 변화에 대한 생각, 2025년 사육면적 확대 관련 입장, 2025년 A형 케이지의 전환 예정 여부와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이다.
-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 부분에서는 성별, 연령대를 질문하였고, 농장 운영 현황에서는 농장의 위치, 가축사육제한구역 여부, 케이지 유형, 입식 가능 두수, 입식 두수, 케이지 설치 시기, 케이지 교체 주기, 최근 케이지 교체 시기, 케이지 제작업체, 산란율, 일일생산량, 출하 횟수, 출하 규모, 주 판로, 거래 유통업체 수, 희망 가격, 농장 운영 기간, 향후 운영 예상 기간, 농장 승계 계획 등을 질문하였다.
- 업계 변화에 대한 생각 부분에서는 동물복지농장 여부, 동물복지 요구 체감 정도, 동물복지 요구 공감 정도, 동물복지 확대 전망, 동물복지 전환 비용, 동물복지란 희망 가격,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하였다.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 2025년 사육면적 확대 관련 입장과 관련하여서는 사육면적 확대 인지 여부, 사육면적 확대 시 요구되는 조치, 사육면적 확대 시 생산원가 변화, 사육면적 확대 시 출하 횟수 변화, 사육면적 확대 시 어려움, 사육면적 확대의 장기적 영향, 2025년에 대한 예상, 사육면적 확대 불응 시 예상되는 상황, 2025년 대응 계획, A형 케이지 전환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 2025년 A형 케이지의 전환 예정 여부와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환 방향 결정의 이유, 동물복지 전환 시 어려움, 동물복지 전환에 필요한 지원 등을 질문하였다.
-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대한산란계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600여명의 산란계 업주이며,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서면조사로, 2023년 5월 23일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2023 전국산란인대회’에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112개(18.7%)의 응답을 직접 대면으로 수거하여 코딩하였다. 설문지의 제목은 ‘산란계협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로 하였으며, 한국동물복지연구소의 협조 요청에 따라 대한산란계협회가 설문을 시행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 이 조사는 조사가 이루어진 ‘2023 전국산란인대회’ 참석자 특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해당 대회에 A형 케이지 농장주의 참석율이 높지 않아 당초 예정했던 2025년 A형 케이지 전환 계획 조사에 한계를 내포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표 1-1] 설문조사대상, 방법, 주요내용

조사대상	조사방법	주요 내용
대한산란계협회 소속 회원 중 ‘2023 전국산란인대회’에 참석한 업주	서면 설문조사	기본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대, 성별 등
		농장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 위치, 케이지 유형, 입식 가능 두수, 입식 두수, 케이지 설치 시기, 케이지 교체 주기, 최근 케이지 교체 시기, 케이지 제작 브랜드, 산란율, 일일생산량, 출하 주기, 출하 규모, 거래 유통업체 수, 주 판로, 희망 가격, 가축사육제한구역 여부, 농장 운영 기간, 향후 운영 예상 기간, 농장 승계 계획
		업계 변화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복지농장 여부, 동물복지 요구 체감 정도, 동물복지 요구 공감 정도, 동물복지 확대 전망, 동물복지 전환 비용, 동물복지란 희망 가격, 희망 연소득, 운영상 어려움,

		운영 관행,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2025년 사육면적 확대 관련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육면적 확대 인지 여부, 사육면적 확대 시 요구되는 변화, 사육면적 확대 시 생산원가 변화, 사육면적 확대 시 출하 횟수 변화, 사육면적 확대 시 어려움, 2025년에 대한 예상, 사육면적 확대의 장기적 영향, 사육면적 확대 불응 시 예상되는 상황, 2025년 대응 계획, A형 케이지 전환 계획
		2025년 A형 케이지의 전환 예정 여부와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 방향 결정의 이유, 동물복지 전환 시 어려움, 동물복지 전환에 필요한 지원 등

[표 1-2] 설문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지역
조사 대상	대한산란계협회 회원 (약 600명)
조사 방법	서면 조사
표본 수	총 112 표본 (응답률 18.7%)
조사 기간	2023년 5월 23일
조사 기관	한국동물복지연구소

2) 포커스그룹인터뷰

- 2025년부터 시행되는 산란계 한 마리당 0.075㎡의 면적을 제공해야 하는 정책과 관련한 산란계 농장주들의 상세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설문조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성격의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2023년 5월 3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대한산란계협회를 방문하여 임원 3인(회장, 총괄국장, 정책위원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어 5월 9일에는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 포천시 부를 방문하여 A형 농장주 1명(6만수 사육)을 포함한 2명의 회원을 인터뷰하였다.
- 인터뷰 방식은 설문지 초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1-3] 포커스그룹인터뷰

구분	2023년
조사 지역	(1차) 충북 청주, (2차) 경기 포천
조사 대상	(1차) 대한산란계협회 임원, (2차)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 포천지부
조사 방법	포커스그룹인터뷰
조사 횟수	2회
조사 일시	(1차) 2023년 5월 3일, (2차) 2023년 5월 9일
조사 기관	한국동물복지연구소

2. 설문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 조사에서 연령대, 성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2-1] 조사항목별 응답자 특성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12	100
성별	남성	82	73.2
	여성	29	25.9
	미응답	1	0.9
연령	20대	2	1.8
	30대	8	7.1
	40대	21	18.8
	50대	28	25.0
	60대	43	38.4
	70대 이상	9	8.0
	미응답	1	0.9

* 표에 기록된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이하 모든 표에도 동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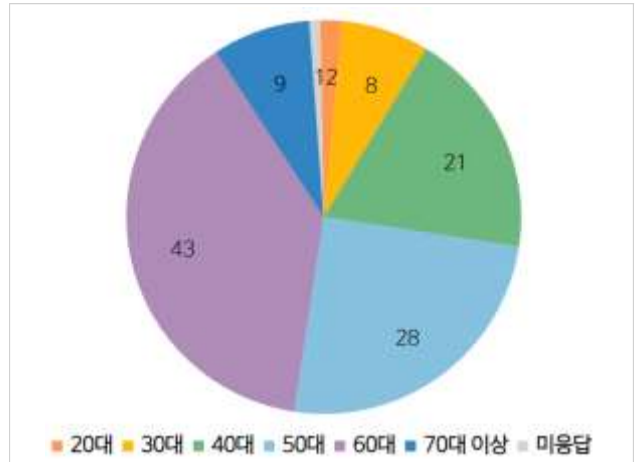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N=112) 중 ‘남성’이 73.2%로 대다수 차지했고, ‘여성’은 25.9%를 차지하였다.
- 응답자 중 ‘60대’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25.0%, ‘40대’ 18.8%, ‘70대 이상’ 8.0%, ‘30대’ 7.1%, 20대 1.8% 순으로 조사되었다.

- 2021년 조사에서는 남성 88.3%, 여성 9.7%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의 경우 50대 35.9%, 40대와 60대 각 23.3%, 70대 이상 10.7%, 30대 5.8%, 20대가 1.0% 순이었다.

[그림 2-1] 성별 분포 (단위: 명)



[그림 2-2] 연령 분포 (단위: 명)



나. 농장 운영 현황

- 농장 운영 현황에서는 농장이 위치한 지역, 사육환경 및 사육두수, 운영 기간, 케이지 설치 시기, 케이지 교체 주기, 입식 가능한 두수, 입식 두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1) 지역적 분포

- ‘귀하의 농장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응답자들의 산란계 농장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경상북도(19.8%), 충청남도(13.8%), 경기도 (12.9%) 등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산란계 농장을 가진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지역별 농장 현황 응답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116	100
지역	강원도	13	11.2
	경기도	15	12.9
	경상남도	9	7.8

	경상북도	23	19.8
	전라남도	13	11.2
	전라북도	13	11.2
	제주특별자치도	0	0.0
	충청남도	16	13.8
	충청북도	8	6.9
	광주광역시	0	0.0
	대구광역시	0	0.0
	대전광역시	0	0.0
	부산광역시	0	0.0
	서울특별시	0	0.0
	세종특별자치시	6	5.2
	울산광역시	0	0.0
	인천광역시	0	0.0

*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고, 112명 모두가 응답하였다.

- 비교를 위하여 통계청의 2023년 2분기 시도별 산란계 농장 수 및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았으며,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 상대적으로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의 참여율이 높고 경기도의 참여율이 낮았는데, 이는 조사가 이루어진 ‘2023 전국산란인대회’의 지역별 참여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3] 2023년 2분기 전국 지역별 농장 현황

조사항목		농장 수		사육두수	
		N	비율(%)	N	비율(%)
전체		943	100	75,189,750	100
지역	강원도	62	6.6	3,779,590	5.0
	경기도	203	21.5	19,619,029	26.1
	경상남도	85	9.0	7,206,517	9.6
	경상북도	152	16.1	15,147,476	20.1
	전라남도	76	8.1	4,482,328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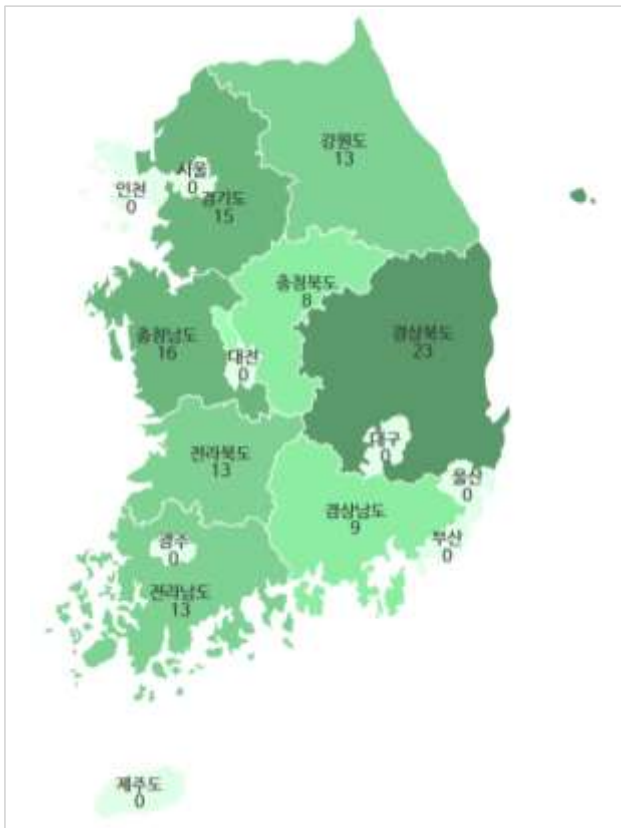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전라북도	68	7.2	3,861,985	5.1
제주특별자치도	27	2.9	1,114,987	1.5
충청남도	133	14.1	10,774,938	14.3
충청북도	96	10.2	5,919,202	7.9
광주광역시	3	0.3	87,450	0.1
대구광역시	2	0.2	295,000	0.4
대전광역시	0	0.0	0	0.0
부산광역시	0	0.0	0	0.0
서울특별시	0	0.0	0	0.0
세종특별자치시	18	1.9	2,290,980	3.0
울산광역시	9	1.0	371,108	0.5
인천광역시	9	1.0	239,160	0.3

(출처: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0061&conn_path=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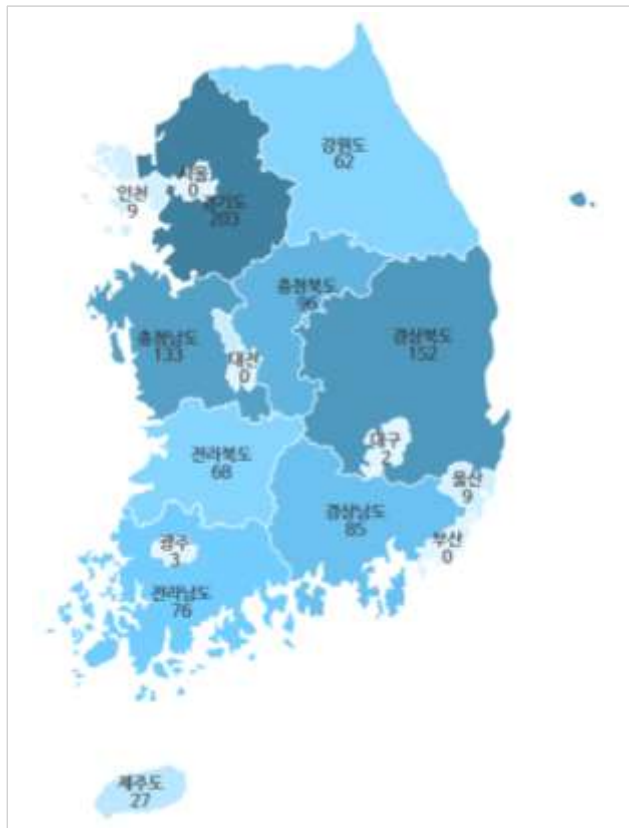
[그림 2-3] 농장 위치 응답

(단위: 명)



[그림 2-4] 전국 농장 수

(단위: 곳)



- 2021년 조사에서는 농장위치가 경기도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라북도 12.6%, 충청남도과 경상남도가 10.7%, 전라남도과 세종특별자치시가 9.7%, 충청북도 8.7%, 제주특별자치도가 7.8%, 인천광역시가 3.9%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없었다. 이는 당시 대한양계협회 산란계지부 별 협조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귀하의 농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는 46.4%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경우가 없음’이라고 답했고, 35.7%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경우가 있음’이라고 답하여, 응답자의 1/3 이상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산란계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가축사육제한구역 여부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12	100
가축사육제한 구역 여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경우가 있음	40	35.7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경우가 없음	52	46.4
	가축사육제한구역 해당 여부를 잘 모르고 있음	8	7.1
	미응답	12	10.7

[그림 2-5] 가축사육제한구역 여부

(단위: 명)



2) 케이지 특성 및 사육두수

- 농장에 설치한 케이지의 특성에 대한 조사 항목은 케이지 유형 및 사육밀도, 사육밀도 준수 여부, 입식 가능 두수와 입식 두수, 케이지의 설치 시기와 교체 주기 및 최근 교체 시기, 케이지 제작업체 등이다.
- ‘귀하는 몇 곳의 A형 또는 H형(직립식)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케이지 유형 및 기준 사육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의 대다수인 66.2%는 ‘H형 직립식 무창계사(0.05㎡/마리)’였으며, ‘H형 직립식 무창계사(0.075㎡/마리)’도 18.1%를 차지했다. ‘A형 계사(0.05㎡/마리)’라는 응답은 15.7%에 그쳐, ‘2023 전국산란인대회’에 참석한 산란계 농장주들의 경우 A형 계사보다는 H형 직립식 무창계사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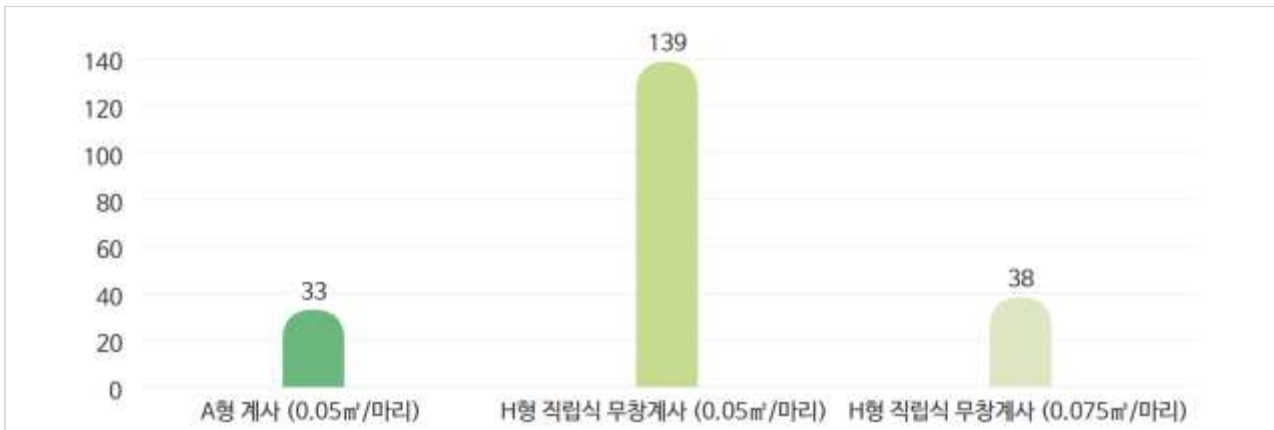
[표 2-5] 케이지 유형 및 기준 사육밀도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177	100
사육 밀도	A형 계사 (0.05㎡/마리)	33	15.7
	H형 직립식 무창계사 (0.05㎡/마리)	139	66.2
	H형 직립식 무창계사 (0.075㎡/마리)	38	18.1

* 전체 응답자 112명 중 99명이 케이지 유형 및 기준 사육밀도에 대해 응답하였고, 2곳 이상 농장을 운영하여 중복 응답한 경우는 46명(47.4%)이었다.

[그림 2-6] 케이지 유형 및 기준 사육밀도

(단위: 명)



- ‘귀하가 운영 중인 농장의 사육밀도는 잘 지켜지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 기준 사육밀도 별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80.0%였으며, 13.8%는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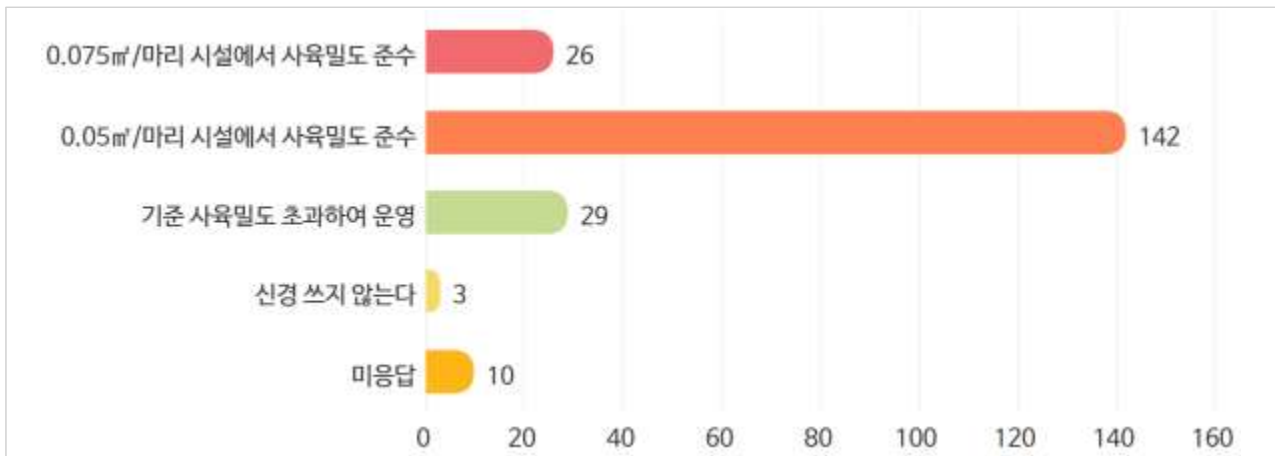
[표 2-6] 사육밀도 준수 여부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210	100
사육밀도 준수 여부	0.075㎡/마리 시설에서 사육밀도 준수	26	12.4
	0.05㎡/마리 시설에서 사육밀도 준수	142	67.6
	기준 사육밀도 초과하여 운영	29	13.8
	신경 쓰지 않는다	3	1.4
	미응답	10	4.8

* 전체 응답자 112명 중 99명이 케이지 유형 및 사육밀도에 대해 응답하였고, 이 중 88명이 사육밀도 준수 여부에 대해 응답하였다. 케이지 유형 및 사육밀도를 밝히지 않고 사육밀도 준수 여부만 응답한 6건은 제외하였다.

[그림 2-7] 사육밀도 준수 여부

(단위: 명)



- 농장주별 입식 가능 두수와 입식 두수를 조사하였다. ‘귀하의 농장은 0.05㎡/마리 기준으로 최대 몇 수까지 입식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에, ‘5만 초과 ~ 10만 이하’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만 이하’ 28.6%, ‘10만 초과 ~ 15만 이하’가 8.0%, ‘30만 초과’가 4.5%, 그리고 ‘20만 초과 ~ 25만 이하’, ‘25만 초과 ~ 30만 이하’가 각 3.6%를 차지하였다. 10만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0만 이하가 67.0%, 10만 초과 농장이 21.5%였다. ‘현재 귀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하의 농장에 입식한 산란계는 몇 수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파악한 입식 두수 역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사육 두수 합계에서는 응답자의 4.5%에 불과한 ‘30만 초과’ 농장이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8.0%를 차지하여, 산란계 농장의 대형화 추세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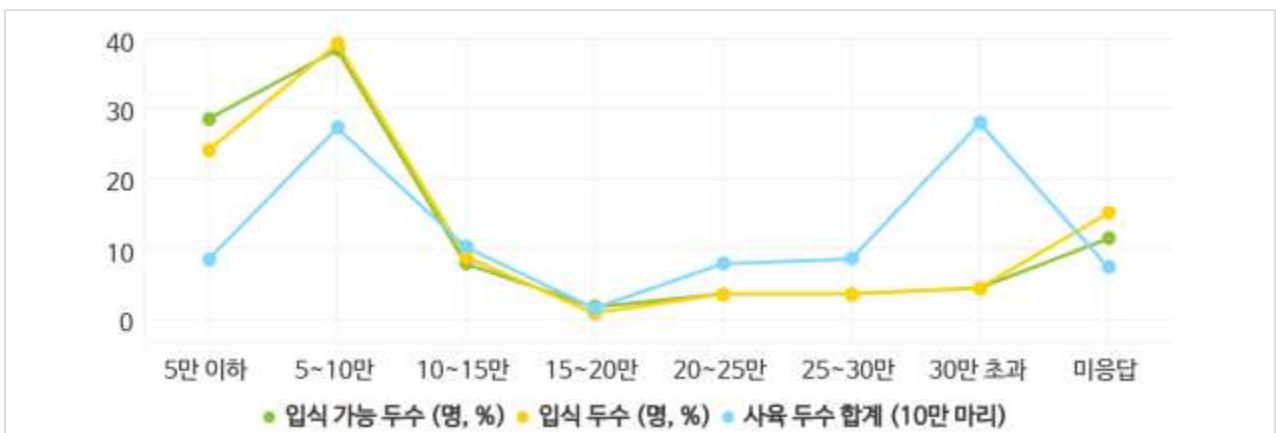
[표 2-7] 농장주별 입식 가능 두수 및 입식 두수

조사항목		응답자*					
		입식 가능 두수		입식 두수		사육 두수 합계**	
		N	비율(%)	N	비율(%)	N	비율(%)
전체		112	100	112	100	12,835,780	100
사육 환경	5만 이하	32	28.6	27	24.1	1,099,900	8.6
	5만 초과 ~ 10만 이하	43	38.4	44	39.3	3,499,500	27.3
	10만 초과 ~ 15만 이하	9	8.0	10	8.9	1,331,880	10.4
	15만 초과 ~ 20만 이하	2	1.8	1	0.9	200,000	1.6
	20만 초과 ~ 25만 이하	4	3.6	4	3.6	1,030,000	8.0
	25만 초과 ~ 30만 이하	4	3.6	4	3.6	1,117,000	8.7
	30만 초과	5	4.5	5	4.5	3,590,000	28.0
	미응답	13	11.6	17	15.2	967,500	7.5

* 전체 응답자 112명 중 입식 가능 두수는 99명이, 입식 두수는 95명이 응답하였다. 둘 중 하나만 응답한 사람은 6명이며, 둘 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2명이었다.

** 사육 두수 합계는 케이지 유형 및 기준 사육밀도 문항과 입식 두수 문항 둘 중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두 문항의 값이 다른 경우 중간값을 활용하였다.

[그림 2-8] 입식 가능 두수와 입식 두수 및 사육 두수 합계



- 케이지 유형 및 기준 사육밀도에 대한 질문과 입식 두수에 대한 질문을 통해 파악한 응답자별 평균 사육두수는 123,421.1마리였다.

[표 2-8] 총 사육두수 및 평균 사육두수

조사항목	평균값
총 사육두수	12,835,780마리 (N=104)
평균 사육두수	123,421.1마리 (N=104)

- 조사된 사육두수 중 A형 농장의 사육두수는 총 736,100마리, 평균 사육두수는 약 32,004.4마리였다.

[표 2-9] A형 농장 사육두수 및 평균 사육두수

조사항목	평균값
총 사육두수	736,100마리 (N=23)
평균 사육두수	32,004.4마리 (N=23)

- 케이지의 설치 시기와 교체 주기 및 최근 교체 시기를 살펴보면, ‘현재 귀하의 농장 내 (사용 중인) 케이지는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5년 초과 ~ 10년 이내’가 34.5%로 가장 많았고, ‘10년 초과 ~ 15년 이내’가 23.5%, ‘5년 이내’가 16.8%, ‘20년 초과 ~ 25년 이내’가 8.4%, ‘25년 초과 ~ 30년 이내’가 6.7%, ‘15년 초과 ~ 20년 이내’가 5.9% 순이었다.
- ‘귀하의 농장에서는 대략 몇 년을 주기로 케이지를 교체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20년’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년 이상’이 33.3%, ‘약 15년’이 15.7%, ‘약 10년’이 12.0%, ‘약 5년’이 1.9%를 차지해, 케이지 교체 주기가 길수록 응답수가 많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케이지 교체 주기가 약 20년 또는 그보다 길다고 응답한 농가는 67.6%에 달했다.
- ‘귀하의 농장에서 가장 최근 케이지를 교체 설치한 해는 몇 년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2010년대’가 46.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뒤이어 ‘2000년대’가 16.0%, ‘2020년대’가 15.1%, ‘1990년대’가 3.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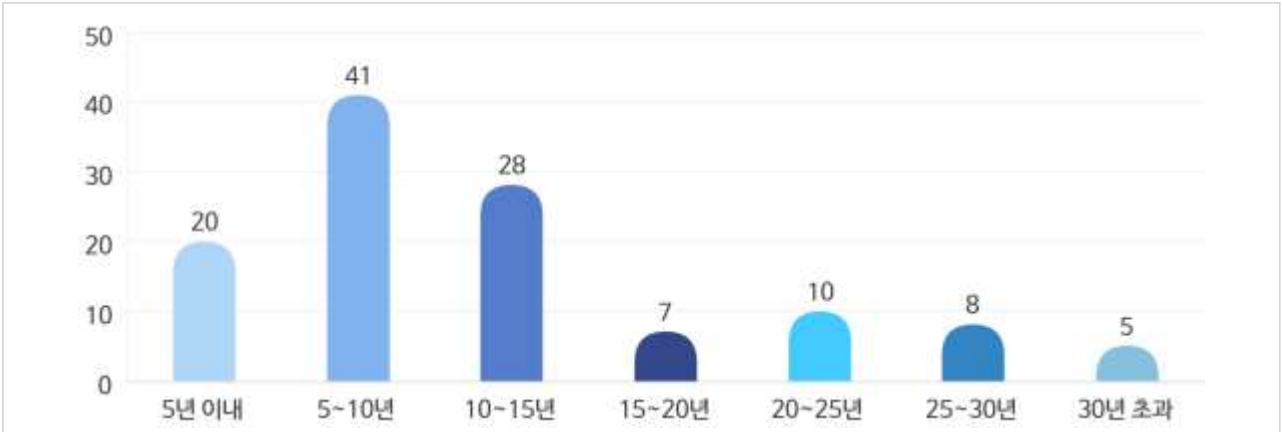
[표 2-10] 케이지의 설치 시기와 교체 주기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119	100
케이지 설치 시기	5년 이내	20	16.8
	5년 초과 ~ 10년 이내	41	34.5
	10년 초과 ~ 15년 이내	28	23.5
	15년 초과 ~ 20년 이내	7	5.9
	20년 초과 ~ 25년 이내	10	8.4
	25년 초과 ~ 30년 이내	8	6.7
	30년 초과	5	4.2
전체		108	100
케이지 교체 주기	약 5년	2	1.9
	약 10년	13	12.0
	약 15년	17	15.7
	약 20년	37	34.3
	20년 이상	36	33.3
	기타	3	2.8
전체		106	100
케이지 최근 교체 시기	2020년대	16	15.1
	2010년대	49	46.2
	2000년대	17	16.0
	1990년대	4	3.8
	기타	20	18.9

* 전체 응답자 중 케이지 설치 시기 문항에는 109명이, 케이지 교체 주기 문항에는 106명이, 케이지 최근 교체 시기 문항에는 106명이 응답하였으며, 농장이 여러 개일 경우를 고려하여 모두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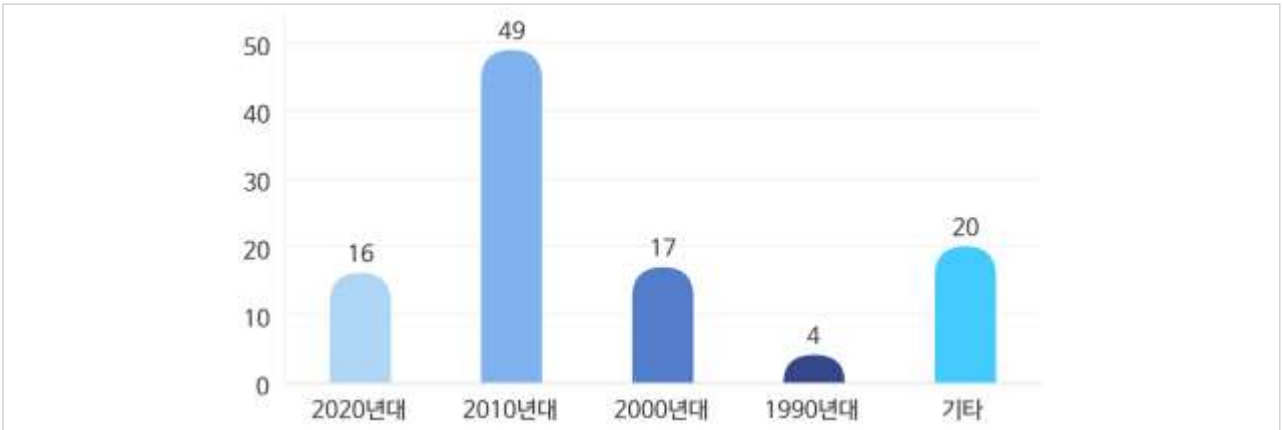
[그림 2-9] 케이지의 설치 시기

(단위: 명)



[그림 2-10] 케이지 최근 교체 시기

(단위: 명)



○ 이 중 A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의 케이지 설치 시기와 교체 주기만을 추려 살펴보면, 케이지 설치 시기는 ‘10년 초과 ~ 15년 이내’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케이지 교체 주기는 ‘약 20년’이 56.5%, ‘20년 이상’이 26.1%였다.

[표 2-11] A형 케이지 농장주의 설치 시기 및 교체 주기 응답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24	100
A형 농장주 케이지 설치 시기	5년 이내	0	0.0
	5년 초과 ~ 10년 이내	3	12.5

	10년 초과 ~ 15년 이내	10	41.7
	15년 초과 ~ 20년 이내	3	12.5
	20년 초과 ~ 25년 이내	4	16.7
	25년 초과 ~ 30년 이내	2	8.3
	30년 초과	2	8.3
전체		23	100
A형 농장주 케이지 교체 주기	약 5년	0	0.0
	약 10년	2	8.7
	약 15년	2	8.7
	약 20년	13	56.5
	20년 이상	6	26.1
	기타	0	0.0

* 전체 응답자 중 A형 케이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3명이었으며, 복수 농장을 보유한 경우를 고려하여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 ‘귀하의 농장에서 가장 최근 설치하여 현재 사용 중인 케이지는 어느 회사의 제품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케이지 제작업체를 조사한 결과, 국내 제품이 47.9%, 유럽 제품이 43.6%, 기타 수입산이 4.3%를 차지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내에서는 배터리 케이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럽 기업들은 배터리 케이지 사용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케이지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었다.
- 유럽연합이 탄소누출(Carbon Leakage)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후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2023년 5월 16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발효하여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⁵⁾, 기업들의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정보공개 요구가 활발해지는 국제 정세를 살펴볼 때, 향후 유럽이 축산물 거래 시 자신들의 동물복지 기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요구한다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케이지에서 생산한 달걀이라고 할지라도 거래 시 동물복지 관련 규제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이 동물의 복지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강력한 동물복지 기준을 내세우는 기초를 취하는 데 반해, 회원국의 케이지 생산 및 수출은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

5)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ext with EEA relevance), 2023.5.16. <http://data.europa.eu/eli/reg/2023/956/o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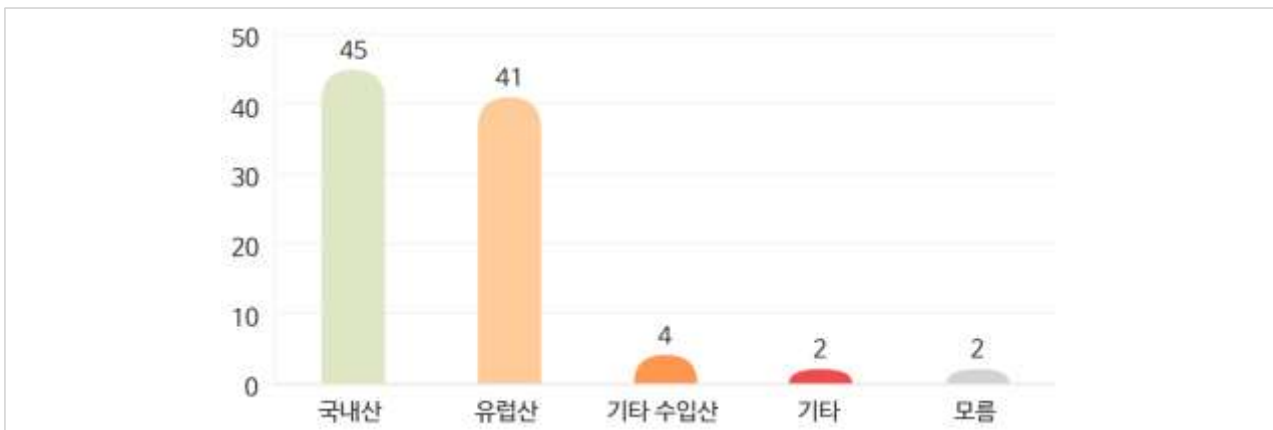
[표 2-12] 케이지 제작업체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94	100
케이지 제작업체	국내산	45	47.9
	유럽산	41	43.6
	기타 수입산	4	4.3
	기타	2	2.1
	모름	2	2.1

* 전체 응답자 중 케이지 제작업체 문항에는 86명이 응답하였으며, 농장이 여러 개일 경우를 고려하여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그림 2-11] 수입 케이지 제작업체

(단위: 명)



3) 생산 및 유통 관련

- 산란율 및 일일생산량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본인 농장의 산란율은 평균 86.2%라고 응답했으며, 일일생산량은 평균 약 89,384.2개라고 답했다.

[표 2-13] 산란율 및 일일생산량 평균값

조사항목	평균값
산란율	86.2% (N=96)
일일생산량	89,384.2개 (N=71)

- ‘현재 귀하의 농장 내 대략적인 산란율과 일일 생산량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산란율의 경우 ‘85%’, ‘90%’라는 응답이 각각 3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80%’가 15.7%, ‘95%’가 6.9%, ‘75%’가 3.9%를 차지했다. 일일생산량의 경우 ‘5만 초과 ~ 10만 이하’가 4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5만 이하’가 32.4%를 차지하였다. 하루에 10만개 초과 달걀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25.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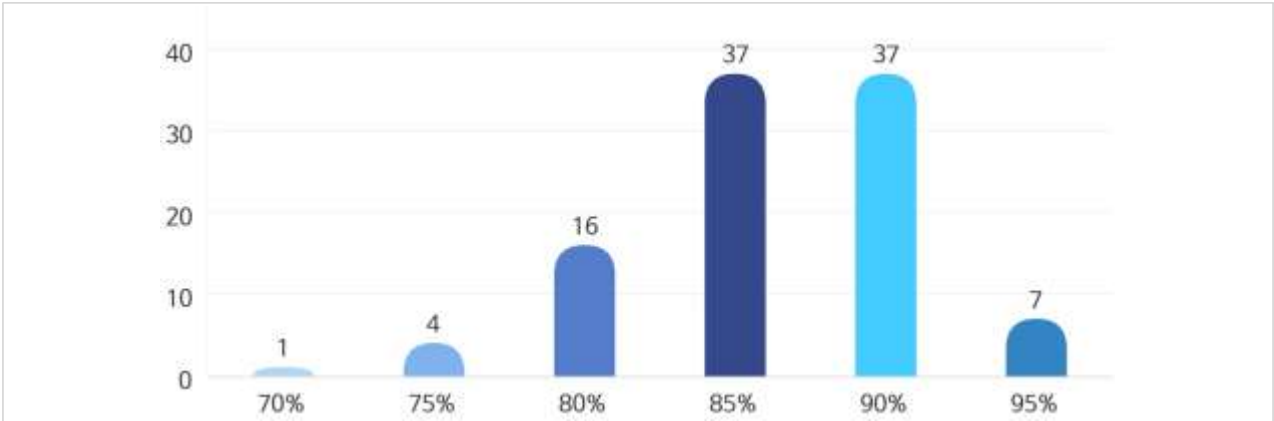
[표 2-14] 산란율 및 일일생산량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102	100
산란율	70%	1	1.0
	75%	4	3.9
	80%	16	15.7
	85%	37	36.3
	90%	37	36.3
	95%	7	6.9
전체		71	100
일일생산량	5만란 이하	23	32.4
	5만란 초과 ~ 10만란 이하	30	42.3
	10만란 초과 ~ 15만란 이하	6	8.5
	15만란 초과 ~ 20만란 이하	5	7.0
	20만란 초과 ~ 25만란 이하	3	4.2
	25만란 초과 ~ 30만란 이하	4	5.6

* 산란율에 대해 96명이 응답하였으며, 복수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 응답하였다. 일일생산량에 대해서는 71명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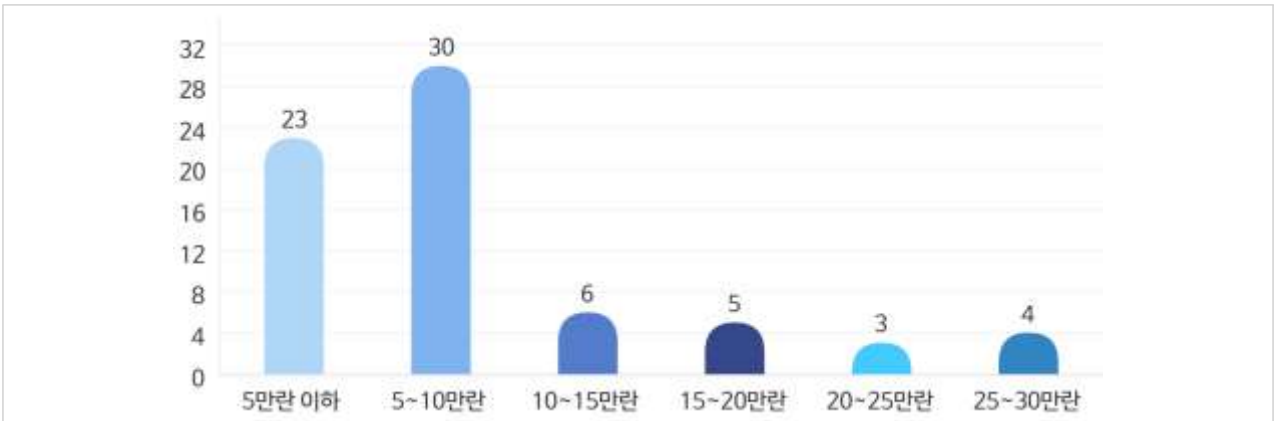
[그림 2-12] 산란율

(단위: 명)



[그림 2-13] 일일생산량

(단위: 명)



○ 출하 횟수와 회당 출하 규모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매주 평균 3,566.4판씩 평균 4.9회 출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하 횟수 및 규모를 모두 응답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1만 수 사육시설 기준 매주 1,849.3판, 55,479란을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2-15] 출하 횟수 및 출하 규모 평균값

조사항목	평균값
출하 횟수	4.9회 (N=83)
회당 출하 규모	3,566.4개 (N=64)
주당 출하 규모	1만 수 사육시설 기준 1,849.3판, 55,479란 (N=59)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 ‘현재 귀하의 농장의 출하는 주 몇 회 몇 판씩 이루어지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출하 횟수의 경우 ‘주 1회 초과 ~ 3회 이하’가 3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 3회 초과 ~ 5회 이하’가 27.7%, ‘주 5회 초과 ~ 7회 이하’가 24.1%, ‘주 7회 초과’가 12.0%를 차지했다. 회당 출하 규모는 ‘2,000판 초과 ~ 4,000판 이하’가 34.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어 ‘4,000판 초과 ~ 6,000판 이하’가 31.3%, ‘2,000판 이하’가 29.7%를 기록하였다. 회당 ‘10,000판 초과’인 대규모로 출하한다는 응답은 3.1%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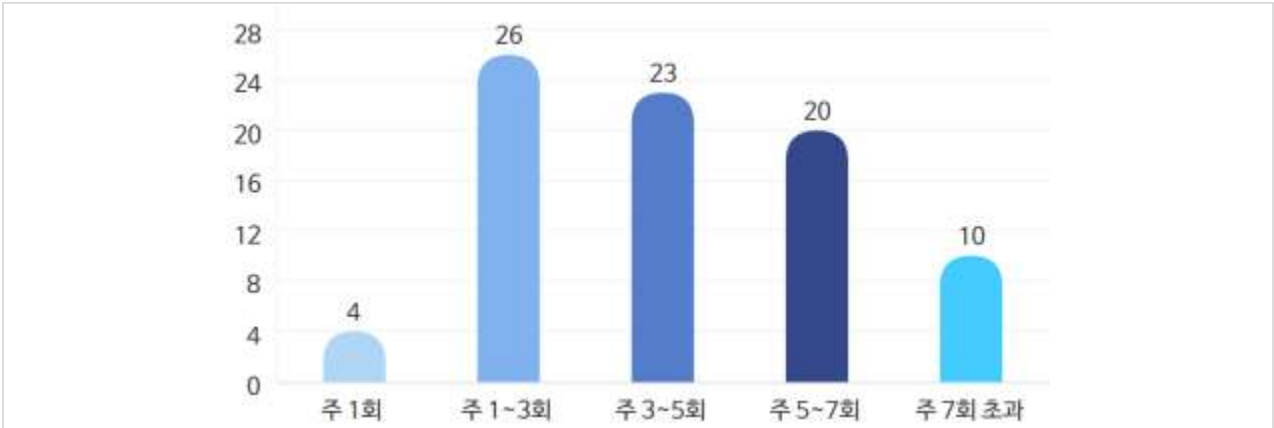
[표 2-16] 출하 횟수 및 회당 출하 규모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83	100
출하 횟수	주 1회	4	4.8
	주 1회 초과 ~ 3회 이하	26	31.3
	주 3회 초과 ~ 5회 이하	23	27.7
	주 5회 초과 ~ 7회 이하	20	24.1
	주 7회 초과	10	12.0
전체		64	100
회당 출하 규모	2,000판 이하	19	29.7
	2,000판 초과 ~ 4,000판 이하	22	34.4
	4,000판 초과 ~ 6,000판 이하	20	31.3
	6,000판 초과 ~ 8,000판 이하	1	1.6
	8,000판 초과 ~ 10,000판 이하	0	0.0
	10,000판 초과	2	3.1

* 출하 횟수에 대해 83명이, 출하 규모에 대해서는 64명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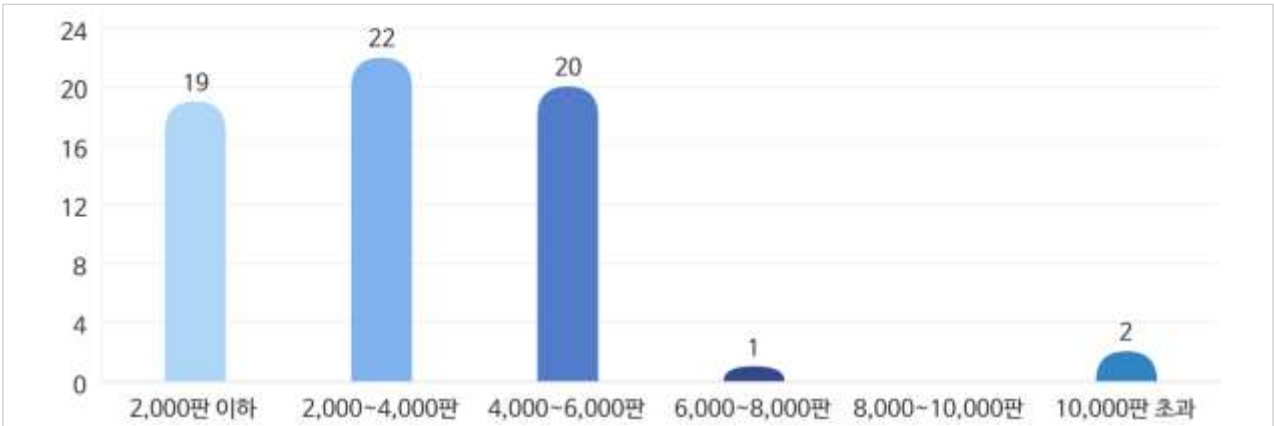
[그림 2-14] 출하 횟수

(단위: 명)



[그림 2-15] 회당 출하 규모

(단위: 명)



- 주 판로와 거래 유통업체 수 조사 결과, ‘현재 귀하의 농장의 주된 판로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중개상’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지역 소매업체’가 26.9%, ‘대기업’이 10.4%, ‘가공업체’가 9.0%, ‘기타’가 3.7%를 차지했다. 기타에는 농협 등이 있었다. ‘현재 귀하의 농장은 몇 곳의 유통업체와 거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3.9곳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17] 주 판로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134	100
주 판로	가공업체	12	9.0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대기업	14	10.4
	중개상	67	50.0
	지역 소매업체	36	26.9
	기타	5	3.7

* 전체 응답자 중 주 판로 문항에는 101명이 응답하였으며,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그림 2-16] 주 판로

(단위: 명)



[표 2-18] 거래 유통업체 수 평균값

조사항목	평균값
거래 유통업체 수	3.9곳 (N=89)

* 전체 응답자 중 거래 유통업체 수 문항에는 91명이 응답하였다.

- ‘2023년 5월 중순 현재 난당 혹은 판당 가격과 희망 가격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2023년 5월 중순의 난당 평균 가격은 148.5원(N=77), 평균 희망 가격은 193.0원(N=82)이었다. 응답자들이 밝힌 희망 난당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30.0% 인상된 가격이었다.

[표 2-19] 현재 난당 가격 및 희망 가격 평균값

조사항목	평균값
현재 난당 가격	148.5원 (N=77)
희망 난당 가격	193.0원 (N=82)

4) 영업 계기 및 지속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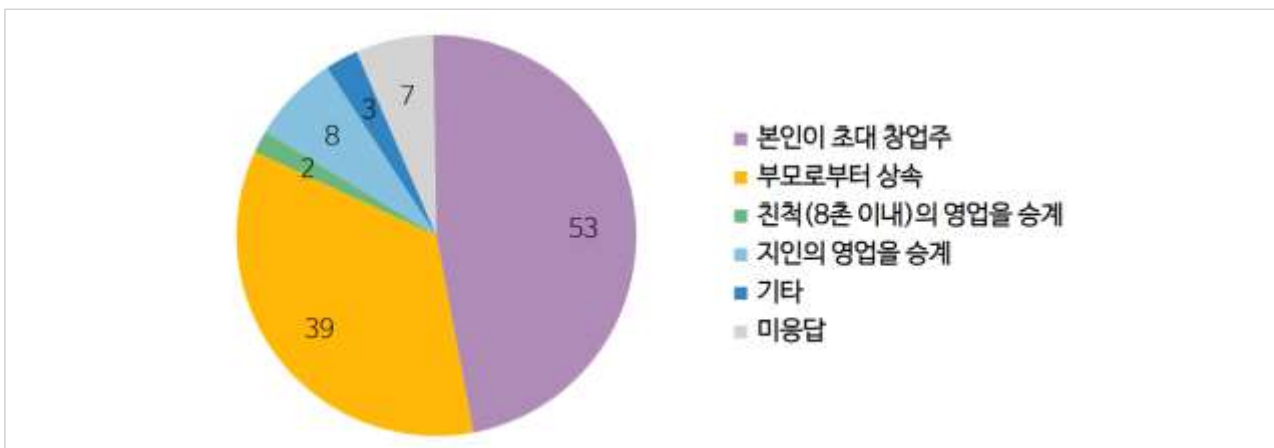
- 영업 계기에 대한 조사에서 ‘귀하가 산란계 영업을 시작한 과정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에 ‘본인이 초대 창업주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모의 영업을 물려받은 2대 업주임’이 34.8%, ‘지인의 영업을 승계함’이 7.1%였다.

[표 2-20] 영업 계기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12	100
영업 계기	본인이 초대 창업주임	53	47.3
	부모의 영업을 물려받은 2대 업주임	39	34.8
	친척(8촌 이내)의 영업을 승계함	2	1.8
	지인의 영업을 승계함	8	7.1
	기타	3	2.7
	미응답	7	6.3

[그림 2-17] 영업 계기

(단위: 명)



- ‘귀하의 농장 운영 기간은 총 몇 년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농장 운영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8%가 ‘30년 초과’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이어 ‘20년 초과 ~ 30년 이하’가 28.6%, ‘10년 초과 ~ 20년 이하’가 19.6%, ‘10년 이하’가 11.6%를 차지하여 농장 운영 기간이 20년이 넘는 응답자가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 ‘귀하는 향후 몇 년간 농장을 직접 운영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10년 초과 ~ 20년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2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년 이하’ 25.9%, ‘20년 초과 ~ 30년 이하’가 18.8%, ‘30년 초과’가 15.2%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향후 운영 예상 기간의 경우 20년 이내로 예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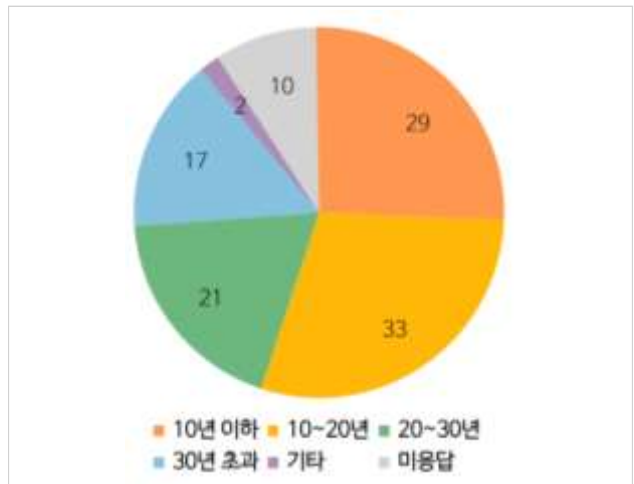
[표 2-21] 농장 운영 기간 및 향후 운영 예상 기간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12	100
농장 운영 기간	10년 이하	13	11.6
	10년 초과 ~ 20년 이하	22	19.6
	20년 초과 ~ 30년 이하	32	28.6
	30년 초과	39	34.8
	미응답	6	5.4
전체		112	100
향후 운영 예상 기간	10년 이하	29	25.9
	10년 초과 ~ 20년 이하	33	29.5
	20년 초과 ~ 30년 이하	21	18.8
	30년 초과	17	15.2
	기타	2	1.8
	미응답	10	8.9

[그림 2-18] 농장 운영 기간 (단위: 명)



[그림 2-19] 향후 운영 예상 기간 (단위: 명)



- 농장 운영 기간 및 향후 운영 예상 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A형 케이지 농장주 응답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귀하의 농장 운영 기간은 총 몇 년입니까?’라는 질문에 ‘20년 초과 ~ 30년 이하’가 43.5%, ‘10년 초과 ~ 20년 이하’가 30.4%, ‘30년 초과’가 2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2] A형 케이지 농장주의 농장 운영 기간 및 향후 운영 예상 기간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23	100
농장 운영 기간	10년 이하	0	0.0
	10년 초과 ~ 20년 이하	7	30.4
	20년 초과 ~ 30년 이하	10	43.5
	30년 초과	5	21.7
	미응답	1	4.3
전체		23	100
향후 운영 예상 기간	10년 이하	10	43.5
	10년 초과 ~ 20년 이하	6	26.1
	20년 초과 ~ 30년 이하	2	8.7
	30년 초과	3	13.0
	미응답	2	8.7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 ‘귀하는 향후 다음과 같은 농장 승계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67.0%가 ‘자녀에게 승계 계획이 있음’이라고 밝혀 대다수를 차지했다. 뒤이어 ‘향후 폐업을 계획하고 있음’이 13.6%, ‘지인에게 승계 계획이 있음’이 8.7% 순이었다.
- ‘농장 승계 계획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5%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승계할 자녀나 친인척이 없어서’, ‘축산업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산업이라는 주변의 인식 때문에’가 각각 21.2%를 기록하였다.

[표 2-23] 승계 계획 여부 및 미계획 시의 이유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103	100
승계 계획 여부	자녀에게 승계 계획이 있음	69	67.0
	친척(8촌 이내)에게 승계 계획이 있음	3	2.9
	지인에게 승계 계획이 있음	9	8.7
	향후 매매를 계획하고 있음	2	1.9
	향후 폐업을 계획하고 있음	14	13.6
	기타	6	5.8
전체		33	100
미계획 시의 이유	승계할 자녀나 친인척이 없어서	7	21.2
	자식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5	45.5
	축산업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산업이라는 주변의 인식 때문에	7	21.2
	폐업지원금이나 매각 등이 운영수익보다 나아서	2	6.1
	기타	2	6.1

* 전체 응답자 중 승계 계획 문항에는 99명이, 미계획 시의 이유에는 33명이 응답하였다. 두 문항 모두 응답한 사람은 32명이었으며, 둘 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2명이었다. 승계 계획 여부의 경우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 A형 케이지 농장주의 응답을 별도로 살펴본 결과, '귀하는 향후 다음과 같은 농장 승계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자녀에게 승계 계획이 있음'이 50.0%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향후 폐업을 계획하고 있음'이 35.0%였다.
- '농장 승계 계획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A형 케이지 농장주들의 응답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건 '자식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55.6%, 그다음으로 '축산업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산업이라는 주변의 인식 때문에'가 33.3%였다.

[표 2-24] A형 케이지 농장주의 승계 계획 여부 및 미계획 시의 이유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20	100
A형 케이지 농장주의 승계 계획 여부	자녀에게 승계 계획이 있음	10	50.0
	친척(8촌 이내)에게 승계 계획이 있음	1	5.0
	지인에게 승계 계획이 있음	2	10.0
	향후 매매를 계획하고 있음	0	0.0
	향후 폐업을 계획하고 있음	7	35.0
전체		9	100
A형 케이지 농장주의 승계 미계획 시의 이유	승계할 자녀나 친인척이 없어서	1	11.1
	자식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아서	5	55.6
	축산업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산업이라는 주변의 인식 때문에	3	33.3
	폐업지원금이나 매각 등이 운영수익보다 나아서	1	11.1

* 전체 응답자 중 A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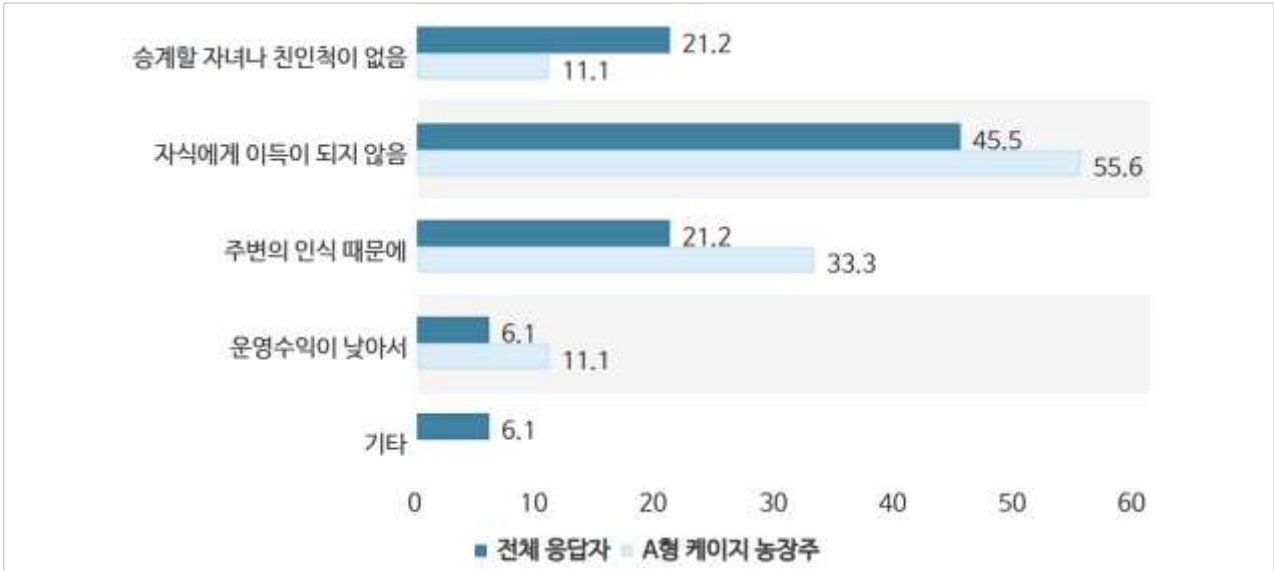
[그림 2-20] 승계 계획 여부

(단위: 비율(%))



[그림 2-21] 승계 미계획 시의 이유

(단위: 비율(%))



- ‘귀하께서는 국내 산란계 산업의 지속을 위해 농장의 연소득(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 소득)이 적어도 얼마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만 수 사육시설 기준 적어도 101,409,863.2원의 연소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25] 산란계 산업의 지속을 위한 농장의 최소 연소득 평균값

조사항목	평균값
적정 최소 연소득	1만 수 사육시설 기준 101,409,863.2원 (N=48)

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입장

1) 동물복지농장 운영 여부

- ‘귀하가 운영 중인 농장 중 동물복지형 농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6.8%의 대다수가 ‘없음’이라고 답하였고, ‘에이비어리가 있는 평사 농장이 있음’과 ‘평사 농장이 있음’이 각각 3.6%, ‘방사 농장이 있음’이 1.8%의 응답을 받았다.

[표 2-26] 동물복지농장 운영 여부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12	100
동물복지농장 운영 여부	없음	86	76.8
	에이비어리가 있는 평사 농장이 있음	4	3.6
	평사 농장이 있음	4	3.6
	방사 농장이 있음	2	1.8
	기타	1	0.9
	미응답	15	13.4

[그림 2-22] 동물복지농장 운영 여부

(단위: 명)



- ‘부리다듬기, 환우 전 도계 진행, 환우 후 생산 유지, 카니발리즘, 산란계의 방란 섭취’를 기존 산란계 관련 운영 방식 및 고충을 예시로 들고 ‘다음 운영 방식 중 귀하의 농장에서 진행 및 관찰되는 방식을 모두 골라 주세요’라고 주문한 결과, 가장 많이 관찰되는 운영 방식은 35.3%를 차지한 ‘환우 후 생산 유지’였고, 이어 ‘환우 전 도계 진행’ 30.1%, ‘부리다듬기’ 19.9%가 있었고 산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카니발리즘’ 13.2%, ‘산란계의 방란 섭취’ 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7] 산란계 관련 운영 방식 및 고충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136	100
산란계 관련 운영 방식 및 고충	부리다듬기	27	19.9
	환우 전 도계 진행	41	30.1
	환우 후 생산 유지	48	35.3
	카니발리즘	18	13.2
	산란계의 방란 섭취	2	1.5

*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으며, 91명이 응답하였다.

- 이를 전체 응답자 수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환우 후 생산 유지’는 42.9%, ‘환우 전 도계 진행’은 36.6%, ‘부리다듬기’는 24.1%, ‘카니발리즘’은 16.1%, ‘산란계의 방란 섭취’는 1.8%의 응답자의 농장에서 진행되거나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28] 진행 및 관찰되는 기존 산란계 축산업 관행의 전체 응답자 대비 비율

조사항목		응답자	
		N=112	N 대비 비율(%)
진행 및 관찰되는 기존 산란계 축산업 관행	부리다듬기	27	24.1
	환우 전 도계 진행	41	36.6
	환우 후 생산 유지	48	42.9
	카니발리즘	18	16.1
	산란계의 방란 섭취	2	1.8

*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으며, 91명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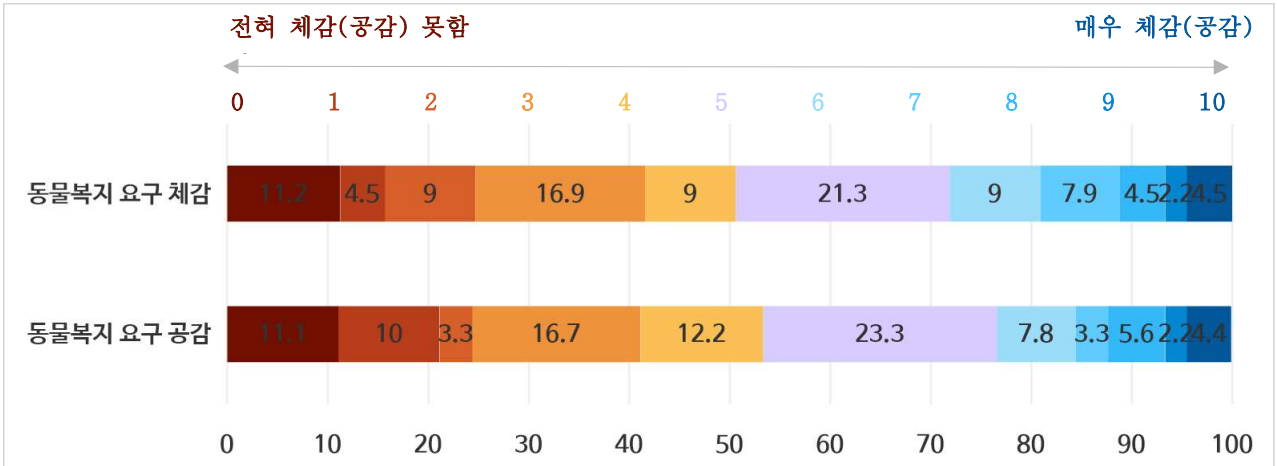
2)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생각

- ‘귀하께서는 국내 산란산업의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체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전혀 체감 못 함’은 0, ‘매우 체감함’은 10으로 하여 10점 척도 점수를 매기도록 부탁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점수 평균값은 4.3이었으며, ‘직접 동물을 관리하는 업주로서,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에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하여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 점수 평균값은 4.1점이었다.

[표 2-29]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를 체감도 및 공감도 평균값

조사항목	평균값
동물복지 증진 요구 체감도	4.3 / 10점
동물복지 증진 요구 공감도	4.1 / 10점

[그림 2-23]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를 체감하는 정도 및 그에 대한 공감 정도 (단위: 비율(%))



3) 동물복지농장 전망에 대한 생각

- ‘귀하께서는 국내 산란산업에서 동물복지 농장 수와 사육수의 비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37.5%는 ‘동물복지농장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응답하였고, 뒤이어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32.1%였다. ‘동물복지농장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응답은 1.8%에 그쳐, 응답자들이 향후 동물복지농장의 비율이 낮아지는 방향보다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대체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30] 향후 동물복지농장의 수 및 사육수 비율 변화 예상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12	100
동물복지농장 수 변화 예상	동물복지농장 비율이 높아진다	42	37.5
	동물복지농장 비율이 낮아진다	2	1.8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36	32.1
	잘 모르겠다	13	11.6
	미응답	19	17.0
전체		112	100
동물복지농장	동물복지 사육수 비율이 높아진다	37	33.0

사육수 비율 변화 예상	동물복지 사육수 비율이 낮아진다	5	4.5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30	26.8
	잘 모르겠다	13	11.6
	미응답	27	24.1

[그림 2-24] 동물복지 농장수 변화 예상 (단위: 명)



[그림 2-25] 동물복지 농장 사육수 변화 예상 (단위: 명)



■ 2021년 조사에서는 동물복지농장 관련 전망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 (N=110) 중 과반을 넘는 52.4%가 국내에서 동물복지 농장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40.8%였다.

- ‘산란산업에서 동물복지 농장 비율이 늘어난다면(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선 응답자들은 동물복지 농장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로 ‘동물복지 관련 정책으로 인하여 규제가 강화됨’(41.5%)과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됨’(38.3%)을 많이 선택하였다. 동물복지 농장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로는 ‘전환하고 싶어도 막대한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움’이 2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사료소비 증가, 방란, 노동량 증가 등 동물복지 운영의 어려움 때문’이 22.6%, ‘그만큼의 수요가 확인되지 않아 수익성 면에서 장점이 없음’이 20.8%, ‘낮선 방식보다는 기존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고수함’이 14.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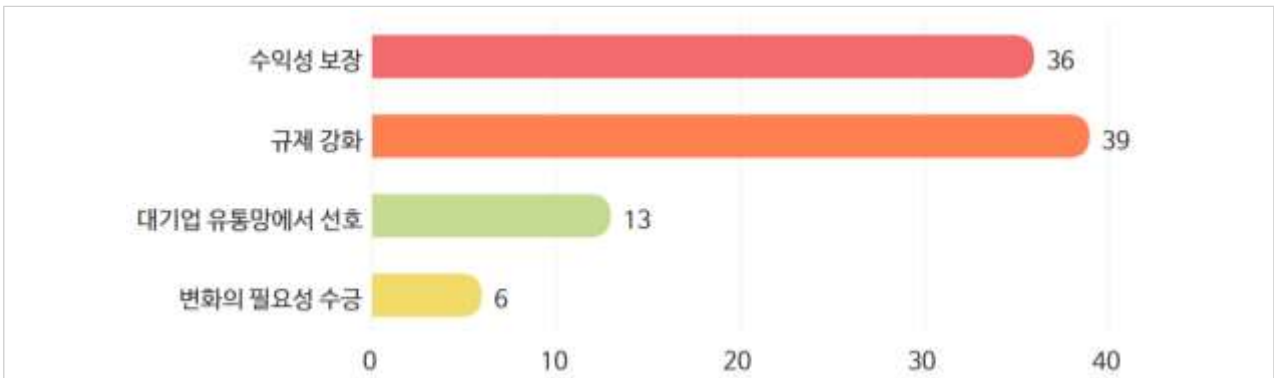
[표 2-31] 동물복지농장 비율이 늘어나거나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94	100
동물복지농장이 늘어난다고 생각한 이유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됨	36	38.3
	동물복지 관련 정책으로 인하여 규제가 강화됨	39	41.5
	국제기준이 변화하여 대기업 유통망에서 선호함	13	13.8
	농장주가 동물복지 증진 등 변화의 필요성에 수긍함	6	6.4
전체		106	100
동물복지농장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	낮선 방식보다는 기존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고수함	15	14.2
	사료소비 증가, 방란, 노동량 증가 등 동물복지 운영의 어려움 때문	24	22.6
	그만큼의 수요가 확인되지 않아 수익성 면에서 장점이 없음	22	20.8
	전환하고 싶어도 막대한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움	28	26.4
	전환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걸려 행정 절차가 걱정됨	6	5.7
	복지란 공시가 제도가 없는 등 유통 및 판로 확보가 걱정됨	10	9.4
	기타	1	0.9

*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다. 두 문항 다 92명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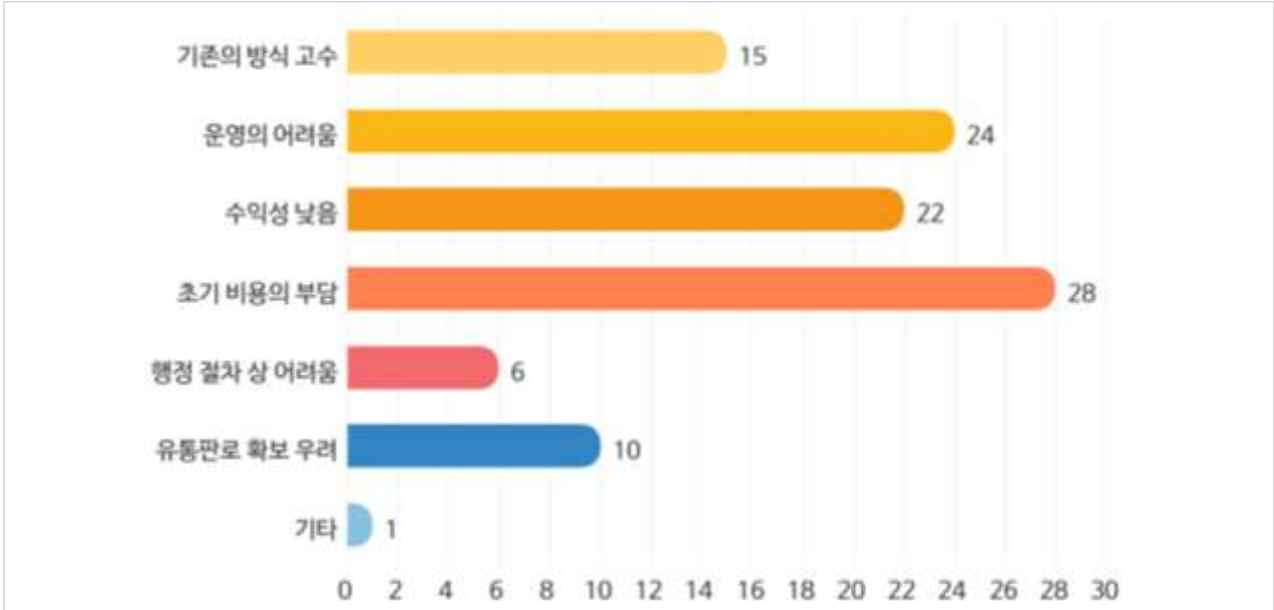
[그림 2-26] 동물복지농장이 늘어난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명)



[그림 2-27] 동물복지농장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명)



4) 동물복지농장 전환에 대한 생각

- 응답자들은 ‘귀하께서는 동물복지 농장 전환 시 초기 시설비용으로 얼마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만 수 사육시설 기준 4.8억의 초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표 2-32] 동물복지 농장 전환 시 예상 초기 시설비용 평균값

조사항목	평균값
동물복지 농장 전환 시 예상 초기 시설비용	4.8억 (N=54)

- ‘귀하께서는 동물복지 농장 전환 시 달걀 가격이 얼마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난당 387.3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3년 5월 현재 산지값인 168.9원의 229.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응답자들은 현재 가격의 129.3% 인상을 희망하였다.⁶⁾

6)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2023년 5월 한 눈에 보는 계란 유통 동향, 2023.12.21.접근, <https://www.ekapepia.com/poultry/poultryTrendStats.do>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표 2-33] 동물복지란 적정가격 평균값

조사항목	평균값
동물복지란 적정가격	난당 387.3원 (N=60)

- ‘업계의 여러 변화 요인과 관련하여 농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과반이 넘는 63.1%는 ‘수입을 통한 정부의 가격 조정’이었고,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가 뒤이어 26.2%를 차지했다.

[표 2-34] 업계 변화 요인 관련 어려움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103	100
동물복지농장 운영 여부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	27	26.2
	채식 문화 등 수요의 변화 가능성	2	1.9
	대체육 등 단백질원의 다변화	4	3.9
	수입을 통한 정부의 가격 조정	65	63.1
	기타	5	4.9

*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으며, 94명이 응답하였다.

[그림 2-28] 업계 변화 요인 관련 어려움

(단위: 명)



라. 2025년 사육면적 확대 관련 입장

1) 2025년 사육면적 확대 관련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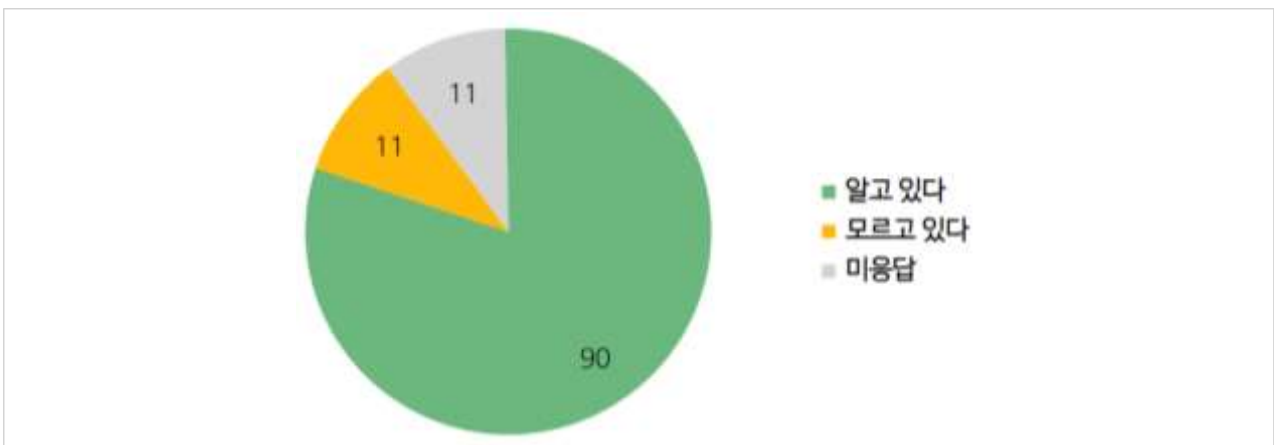
- 이 조사 부문에서는 먼저 2025년 사육면적 확대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질문한 이후, 0.05㎡/마리 기준의 직립식 케이지(H형) 또는 A형 케이지를 어떻게 전환할지 질문하고, 그 응답에 따라 전환 방향, 전환 이유, 예정 시기, 예상되는 어려움, 전환 시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설문을 전개하였다.
- ‘귀하는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2025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한 인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80.4%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8%였다.

[표 2-35] 2025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한 인지 여부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12	100
2025년 사육면적 확대 인지 여부	알고 있다	90	80.4
	모르고 있다	11	9.8
	미응답	11	9.8

[그림 2-29] 2025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명)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 ‘2025년 사육면적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전환된다면, 귀하의 농장은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요구받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현재 대비 50% 이상, 75% 미만 감소’가 52.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현재 대비 25% 이상, 50% 미만 감소’도 14.3%를 차지하여, 2025년에 응답자의 67.0%가 유의미한 사육두수 감소를 요구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36] 2025년 사육면적 확대에 요구되는 조치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12	100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요구되는 조치	이미 0.075㎡/마리로 운영 중	4	3.6
	현재 대비 25% 미만 감소	2	1.8
	현재 대비 25% 이상, 50% 미만 감소	16	14.3
	현재 대비 50% 이상, 75% 미만 감소	59	52.7
	기타	1	0.9
	미응답	30	26.8

[그림 2-30] 2025년 사육면적 확대에 요구되는 조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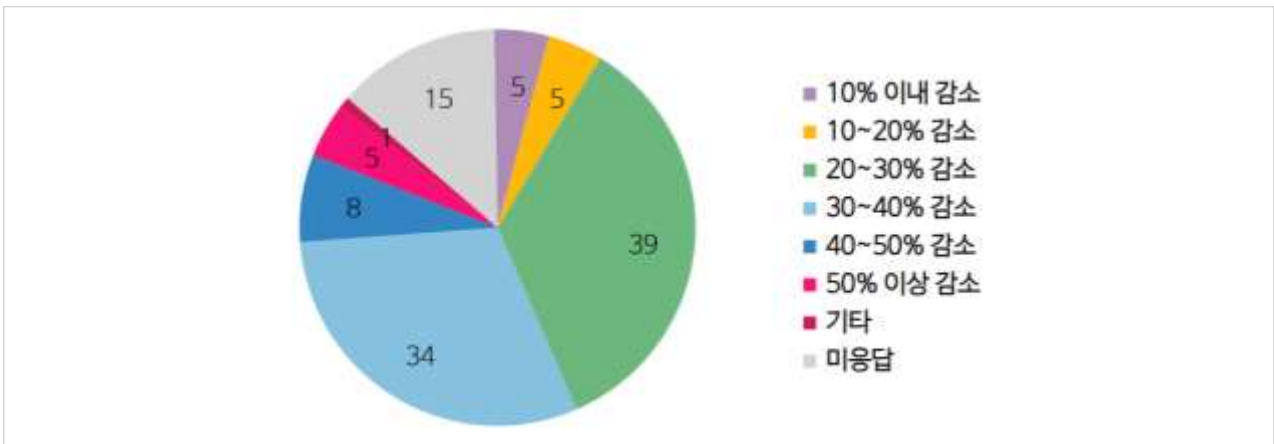
- ‘2025년 사육면적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전환된다면, 귀하의 농장은 다음 중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감소됩니까?’라는 질문에는, 20%~40% 감소한다는 응답이 65.2%에 달하였고, 40~50% 감소한다는 응답이 7.1%, 50% 이상 감소한다는 응답이 4.5%를 차지하였다.

[표 2-37]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육두수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12	100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육두수	10% 이내 감소	5	4.5
	10~20% 감소	5	4.5
	20~30% 감소	39	34.8
	30~40% 감소	34	30.4
	40~50% 감소	8	7.1
	50% 이상 감소	5	4.5
	기타	1	0.9
	미응답	15	13.4

[그림 2-31]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육두수

(단위: 명)



- ‘2025년 사육면적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전환된다면, 예상되는 달걀생산원가는 어느 정도 증가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30% 증가’라는 응답이 25.0%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40% 증가’ 19.6%, ‘40% 이상 증가’가 15.2%, ‘10~20% 증가’가 12.5%, ‘10% 이내 증가’가 8.9% 순이었다.

[표 2-38]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생산원가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12	100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생산원가	10% 이내 증가	10	8.9
	10~20% 증가	14	12.5
	20~30% 증가	28	25.0
	30~40% 증가	22	19.6
	40% 이상 증가	17	15.2
	변하지 않는다	6	5.4
	미응답	15	13.4

[그림 2-32] 2025년 사육면적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생산원가 (단위: 명)



- '2025년 사육면적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전환된다면, 출하 횟수의 변동이 예상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50.0%의 응답자가 '출하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16.1%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표 2-39] 2025년 사육면적 확대 시 출하 횟수 변동 여부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12	100
2025년 사육면적 확대 시 출하 횟수 변동 여부	출하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56	50.0
	출하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18	16.1
	기타	1	0.9
	미응답	37	33.0

- ‘아래에 설명된 문제상황 중에서, 2025년 사육면적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전환 되어 사육두수가 감소하면, 귀하의 농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사육두수 감소와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영난’(33.3%)이었다. 이어 ‘겨울철 사육 적정 온도 유지 어려워 폐사 증가’(18.3%), ‘겨울철 온도 유지 및 환기가 어려워서 호흡기 질병 발생’(17.8%), ‘겨울철 급수시설 동파 등의 문제로 급수, 급이에 문제 발생’(13.3%)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표 2-40] 2025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180	100
2025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겨울철 사육 적정 온도 유지 어려워 폐사 증가	33	18.3
	겨울철 온도 유지 및 환기가 어려워서 호흡기 질병 발생	32	17.8
	겨울철 급수시설 동파 등의 문제로 급수, 급이에 문제 발생	24	13.3
	폐사로 인해 닭이 없는 빈칸 앞의 사료 부패 문제 발생	17	9.4
	사육두수 감소와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영난	60	33.3
	현재와 같을 것이다	10	5.6
	기타	4	2.2

*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으며, 95명이 응답하였다.

[그림 2-33]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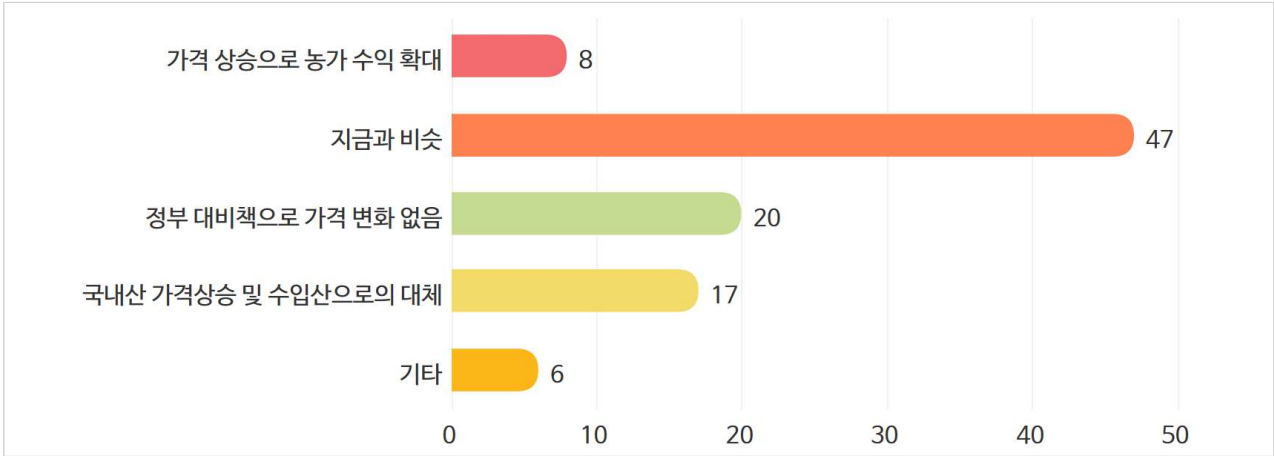
○ ‘귀하께서 예상하시는 2025년 사육면적 확대의 장기적 영향은 어디에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지만, 수입 증가로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가 과반에 가까운 4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가 미리 수입 등으로 대비책을 내놓아 가격변화가 없을 것이다’가 20.4%, ‘사육면적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로 국내산은 가격 상승하고 저가는 수입산으로 대체할 것이다’가 17.3%,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 수익이 확대될 것이다’가 8.2%를 차지했다.

[표 2-41] 2025년 사육면적 확대의 장기적 영향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98	100
2025년 사육면적 확대의 장기적 영향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 수익이 확대될 것이다	8	8.2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지만, 수입증가로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47	48.0
	정부가 미리 수입등으로 대비책을 내놓아 가격변화가 없을 것이다	20	20.4
	사육면적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로 국내산은 가격 상승하고 저가는 수입산으로 대체할 것이다	17	17.3
	기타	6	6.1

*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으며, 96명이 응답하였다.

[그림 2-34] 2025년 사육면적 확대의 장기적 영향 (단위: 명)



○ ‘귀하께서 예상하시는 2025년의 상황은 어디에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따를 예정이지만 유예기간을 더 요구한다’가 4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육면적 확대 조치에 따라 시설이나 운영 방식을 그때까지 바꾼다’가 23.2%, ‘사육면적 확대 조치에 따르지 않는다’가 18.2%를 차지했다. 응답의 5.1%는 ‘2025년에 폐업한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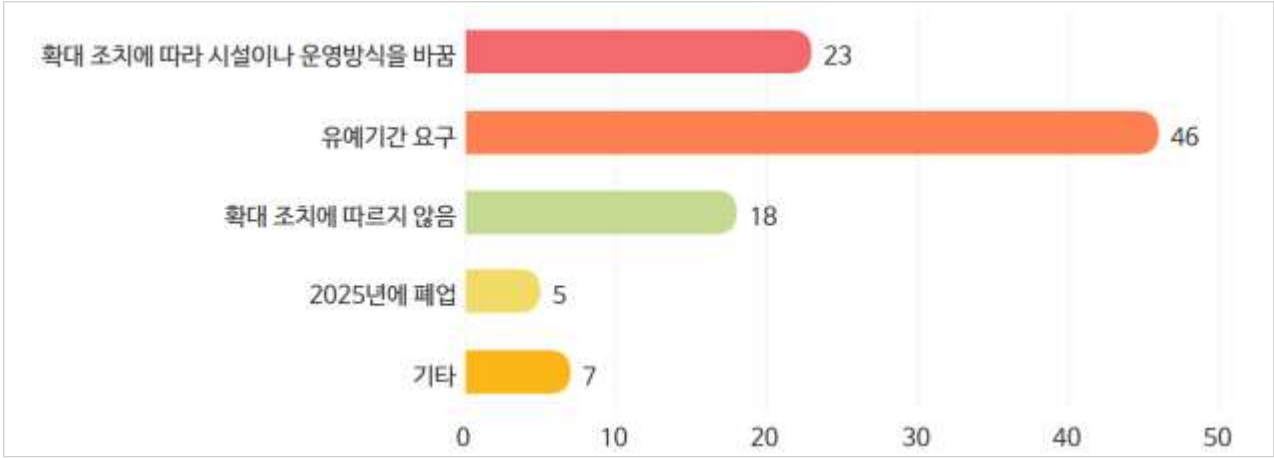
[표 2-42] 2025년 예상되는 산란업계 상황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99	100
2025년 예상되는 산란업계 상황	사육면적 확대 조치에 따라 시설이나 운영 방식을 그때까지 바꾼다	23	23.2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따를 예정이지만 유예기간을 더 요구한다	46	46.5
	사육면적 확대 조치에 따르지 않는다	18	18.2
	2025년에 폐업한다	5	5.1
	기타	7	7.1

*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으며, 96명이 응답하였다.

[그림 2-35] 2025년 예상되는 산란업계 상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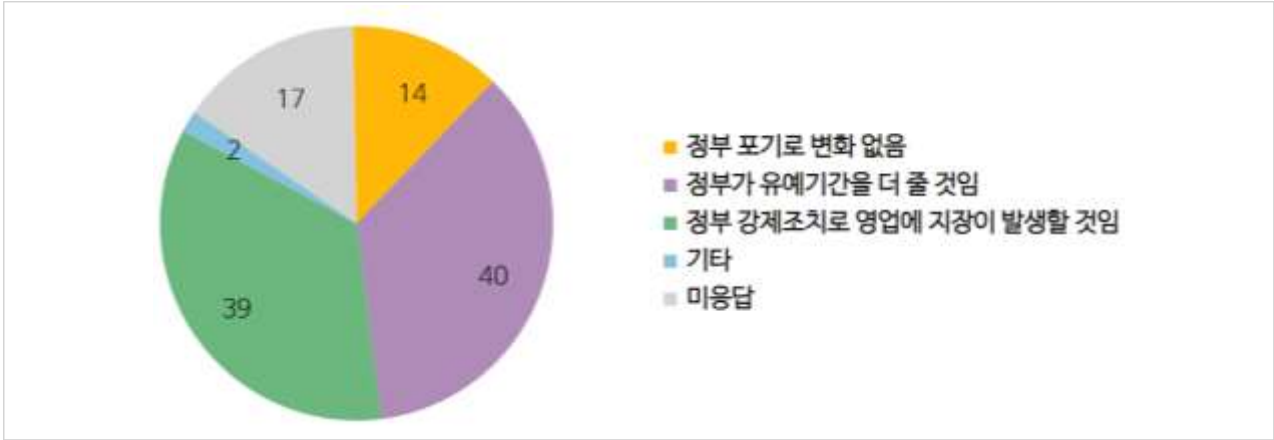
- ‘2025년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7%가 ‘정부가 유예기간을 더 줄 것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와 근소하게 응답자의 34.8%가 ‘정부가 곧 강제조치를 실시하여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정부가 사육면적 확대를 포기하여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2.5%였다.

[표 2-43] 2025년 사육면적 확대 불응 시의 상황에 대한 예상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12	100
2025년 사육면적 확대 불응 시의 상황에 대한 예상	정부가 사육면적 확대를 포기하여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14	12.5
	정부가 유예기간을 더 줄 것이다	40	35.7
	정부가 곧 강제조치를 실시하여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다	39	34.8
	기타	2	1.8
	미응답	17	15.2

[그림 2-36] 2025년 사육면적 확대 불응 시의 상황에 대한 예상

(단위: 명)



○ ‘귀하께서 직립식(H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5년을 대비하여 직립식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전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현재 사육규모 변화 없이 주변 상황을 지켜본다’가 47.1%로 가장 많았고, ‘사육밀도 확대를 지키고 규모가 적은 다단형 케이지시설 교체(사육두수가 덜 감소하도록)’가 21.2%, ‘사육밀도 확대를 지키고 줄어든 두수를 보충하기 위해 육계나 육용종계 등 타 농장을 구매하여 산란계 직립식 케이지로 전환’이 18.8%를 차지했다.

[표 2-44] 2025년 직립식(H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 여부

조사항목		응답*	
		N	비율(%)
전체		85	100
2025년 직립식(H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 여부	직립식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6	7.1
	사육밀도 확대를 지키고 규모가 적은 다단형 케이지시설 교체 (사육두수가 덜 감소하도록)	18	21.2
	사육밀도 확대를 지키고 줄어든 수수를 보충하기 위해 육계나 육용종계 등 타 농장을 구매, 산란계 직립식 케이지로 전환	16	18.8
	현재 사육규모 변화 없이 주변 상황을 지켜본다	40	47.1
	기타	5	5.9

*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으며, 83명이 응답하였다.

[그림 2-37] 2025년 직립식(H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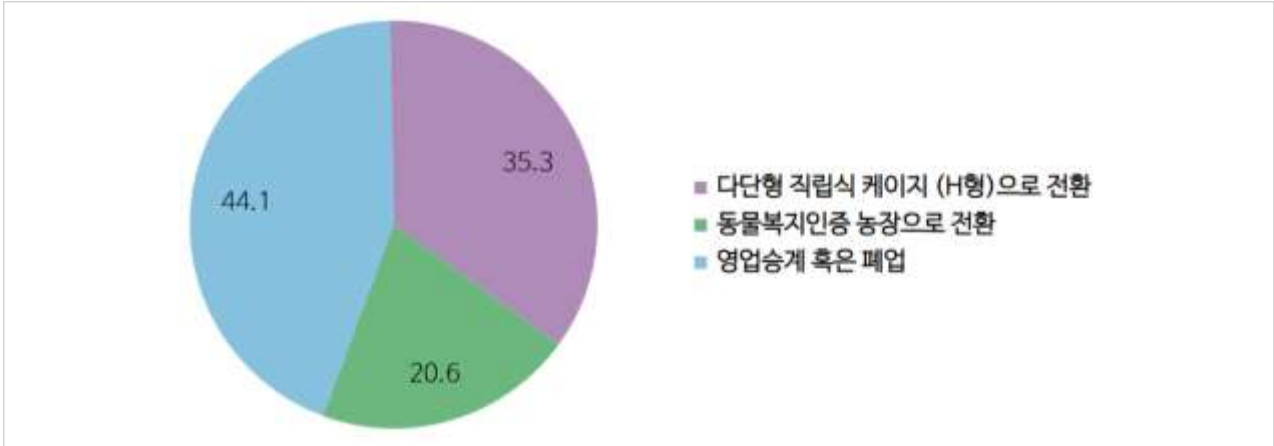
○ ‘귀하께서 A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5년을 대비하여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전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34명이었다. 응답수가 적었던 이유는 조사가 이루어진 ‘2023 전국산란인대회’의 참석자 중에는 A형 케이지를 운영하는 농장주의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항에 응답한 34명의 문항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선택을 살펴보면, ‘영업 승계 혹은 폐업’이 44.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H형)로 전환’이 35.3%, ‘평사실내사육 등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전환’이 20.6% 순이었다.

[표 2-45] 2025년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 여부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응답 중 비율(%)
전체		112	100	34
2025년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 여부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 (H형)로 전환	12	10.7	35.3
	평사실내사육 등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전환	7	6.3	20.6
	영업 승계 혹은 폐업	15	13.4	44.1
	미응답	78	69.6	

[그림 2-38] 2025년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 여부

(단위: 비율(%))



* '귀하께서 A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5년을 대비하여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전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34명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였다.

2)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H형)로 전환하려는 경우

- 2025년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에 대한 질문에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H형)로 전환'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문항에는, 해당 응답자 12명뿐 아니라 다른 응답자들의 참여도 있었다. 아래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모든 응답인 '전체 응답'과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H형)로 전환'을 선택한 12명의 응답자의 응답을 '응답 (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동물복지인증 농장을 선택하지 않고 직립식 케이지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케이지 사육방식이 동물복지농장보다 관리가 더 용이해서'라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물복지 사육방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혹은 잘 몰라서)'가 14.3%, '동물복지 사육방식의 운영이 부담되어서'와 '동물복지란의 판로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각각 13.0%, '시설 개선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해서'가 11.7%, '동물복지란의 공시가가 없어서, 적정 유통가를 알기 어려워서'와 '동물복지란 가격 하락 우려 등 수익성이 직립식 케이지가 더 나을 것 같아서'가 각각 5.2%를 차지했다.
-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H형)로 전환'을 선택한 12명의 응답인 '응답 (가)'만 살펴보면, '케이지 사육방식이 동물복지농장보다 관리가 더 용이해서'라는 응답이 36.4%, '동물복지 사육방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혹은 잘 몰라서)'와 '동물복지 사육방식의 운영이 부담되어서'가 18.2%, '시설 개선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해서'와 '동물복지란의 공시가가 없어서, 적정 유통가를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알기 어려워서'와 '동물복지란 가격 하락 우려 등 수익성이 직립식 케이지가 더 나을 것 같아서'가 각각 9.1%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에서는 공동 3위의 응답이었던 '동물복지란의 판로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는 '응답 (가)'에서는 0.0%라는 점이 두드러지는 차이점이었다.

[표 2-46] 직립식 케이지를 선택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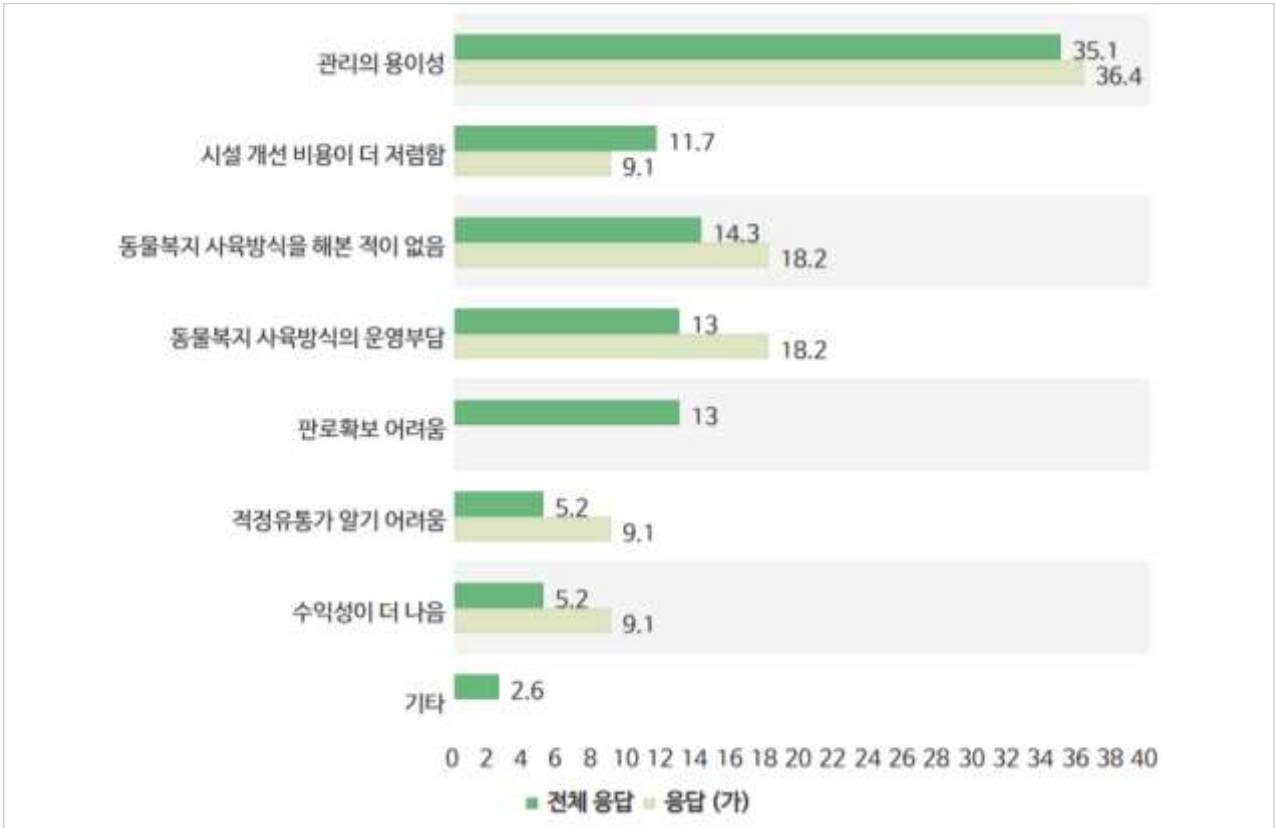
조사항목		전체 응답*		응답 (가)**	
		N	비율(%)	N	비율(%)
전체		77	100	11	100
직립식 케이지 선택 이유	케이지 사육방식이 동물복지농장보다 관리가 더 용이해서	27	35.1	4	36.4
	시설 개선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9	11.7	1	9.1
	동물복지 사육방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혹은 잘 몰라서)	11	14.3	2	18.2
	동물복지 사육방식의 운영이 부담되어서	10	13.0	2	18.2
	동물복지란의 판로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10	13.0	0	0.0
	동물복지란의 공시가가 없어서, 적정 유통가를 알기 어려워서	4	5.2	1	9.1
	동물복지란 가격 하락 우려 등 수익성이 직립식 케이지가 더 나을 것 같아서	4	5.2	1	9.1
	기타	2	2.6	0	0.0

*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52명이었다.

** 응답자 중 '귀하께서 A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5년을 대비하여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전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H형)로 전환'을 선택한 12명을 '응답 (가)'로 규정하여 별도로 응답을 살펴보았다.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다.

[그림 2-39] 직립식 케이지를 선택하는 이유

(단위: 비율(%))



○ ‘향후에도 동물복지인증 농장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거라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앞으로도 동물복지인증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5.6%, ‘향후에는 동물복지인증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가 44.4%였다.

○ ‘응답 (가)’의 경우 두 응답이 동률을 이루었다.

[표 2-47] 향후 동물복지인증 농장 전환 고려 가능성

조사항목		전체 응답*		응답 (가)**	
		N	비율(%)	N	비율(%)
전체		54	100	10	100
향후 동물복지인증 농장 전환 고려 가능성	앞으로도 동물복지인증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30	55.6	5	50.0
	향후에는 동물복지인증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24	44.4	5	50.0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 응답자는 총 54명이었다.

** 응답자 중 '귀하께서 A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5년을 대비하여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전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 (H형)로 전환'을 선택한 12명을 '응답 (가)'로 규정하여 별도로 응답을 살펴보았다.

[그림 2-40] 향후 동물복지인증 농장 전환 고려 가능성

(단위: 비율(%))



- '먼 미래에 정부의 정책이 모든 농장에 동물복지인증을 요구할 거라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향후 정부가 동물복지인증을 요구할 것이다'가 59.2%를 차지했고, '향후에도 정부가 동물복지인증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는 40.8%였다.
- '응답 (가)'의 응답 역시 같은 순서로 나타났으며, 향후 정부가 동물복지인증을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이 55.6%,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4.4%를 기록했다.

[표 2-48] 향후 동물복지인증 의무화 가능성

조사항목		전체 응답*		응답 (가)**	
		N	비율(%)	N	비율(%)
전체		49	100	9	100
향후 동물복지인증 의무화 가능성	향후 정부가 동물복지인증을 요구할 것이다	29	59.2	5	55.6
	향후에도 정부가 동물복지인증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	40.8	4	44.4

* 응답자는 총 49명이었다.

** 응답자 중 '귀하께서 A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5년을 대비하여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전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 (H형)로 전환'을 선택한 12명을 '응답 (가)'로 규정하여 별도로 응답을 살펴보았다.

[그림 2-41] 향후 동물복지인증 의무화 가능성

(단위: 비율(%))



- ‘추후에 어떠한 점이 충족된다면 동물복지 전환을 고려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동물 복지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3가지 선택하여 순위를 매기게 하였을 때 전체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50.0%)이 ‘동물복지인증에 필요한 초기 시설비 보조(예: 철거 및 신축, 난상, 헛대 등)’를 1순위로 꼽았으며, 2순위와 3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동물복지인증에 필요한 초기 시설비 대상 저금리 대출’(60.6%)과 ‘세제 혜택’(32.0%)이었다. 이 순서는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순서와도 일치하여 농장주들이 특히 이 세 가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 ‘응답 (가)’의 선택 역시 1순위와 2순위는 초기의 시설비 보조(50.0%)와 저금리 대출(75.0%)이었으며, 3순위는 초기의 시설비 보조, 직불제 실시, 사육관리 교육, 최저가격 보장제가 동일한 비율(25.0%)로 선택되었다.

[표 2-49] 추후 동물복지 전환 고려를 위해 필요한 지원 순위

응답 항목	전체 응답 비율(%)*			응답 (가)(%)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동물복지인증에 필요한 초기 시설비 보조 (예: 철거 및 신축, 난상, 헛대 등)	50.0	6.1	8.0	50.0	0.0	25.0
동물복지인증에 필요한 초기 시설비 대상 저금리 대출	14.3	60.6	4.0	30.0	75.0	0.0
직불제 실시	8.9	15.2	20.0	20.0	0.0	25.0
세제 혜택	10.7	3.0	32.0	0.0	0.0	0.0
사육관리 편의를 위한 교육	1.8	3.0	16.0	0.0	0.0	25.0
전환 과정에 있어 행정편의 제공	1.8	0.0	8.0	0.0	0.0	0.0
동물복지란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공시 가격 제도	1.8	6.1	4.0	0.0	12.5	0.0

(연례 합의 등을 통한) 최저가격 보장제	3.6	0.0	8.0	0.0	0.0	25.0
판로 확보 지원 (예: 소형 농장 위한 전용 유통망 혹은 협동조합 등)	5.4	6.1	0.0	0.0	12.5	0.0
기타	1.8	0.0	0.0	0.0	0.0	0.0

* 전환에 필요한 지원 순위 조사에는 1순위 50명, 2순위 33명, 3순위 25명이 참여하였다. 3가지를 표시하였으나 순위를 매기지 않은 3건의 데이터는 1순위 중복값으로 처리하였다.

3) 평사실내사육 등 동물복지인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 2025년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에 대한 질문에 ‘평사실내사육 등 동물복지인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문항에는, 해당 응답자 7명뿐 아니라 다른 응답자들의 참여도 있었다. 아래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모든 응답인 ‘전체 응답’과 ‘평사실내사육 등 동물복지인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를 선택한 7명의 응답자의 응답을 ‘응답 (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을 언제로 예정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적인 응답은 ‘5년 이내’가 40.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5년 이후’ 22.2%였다. 이어 ‘3년 이내’가 14.8%, ‘1년 이내’와 ‘2년 이내’가 각각 11.1%를 기록했다.
- ‘평사실내사육 등 동물복지인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를 선택한 7명의 응답인 ‘응답 (나)’의 경우, ‘1년 이내’와 ‘5년 이내’가 각각 33.3%로 가장 많았고, ‘2년 이내’와 ‘3년 이내’도 각각 16.7%를 기록했다. ‘전체 응답’에 비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의 응답 비율이 모두 더 높았으며, 특히 ‘1년 이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배에 이르러, 동물복지인증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는 응답자들은 전환 예정 시기를 보다 근래로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50] 동물복지농장 전환 예정 시기

조사항목		전체 응답*		응답 (나)**	
		N	비율(%)	N	비율(%)
전체		27	100	6	100
동물복지농장	1년 이내	3	11.1	2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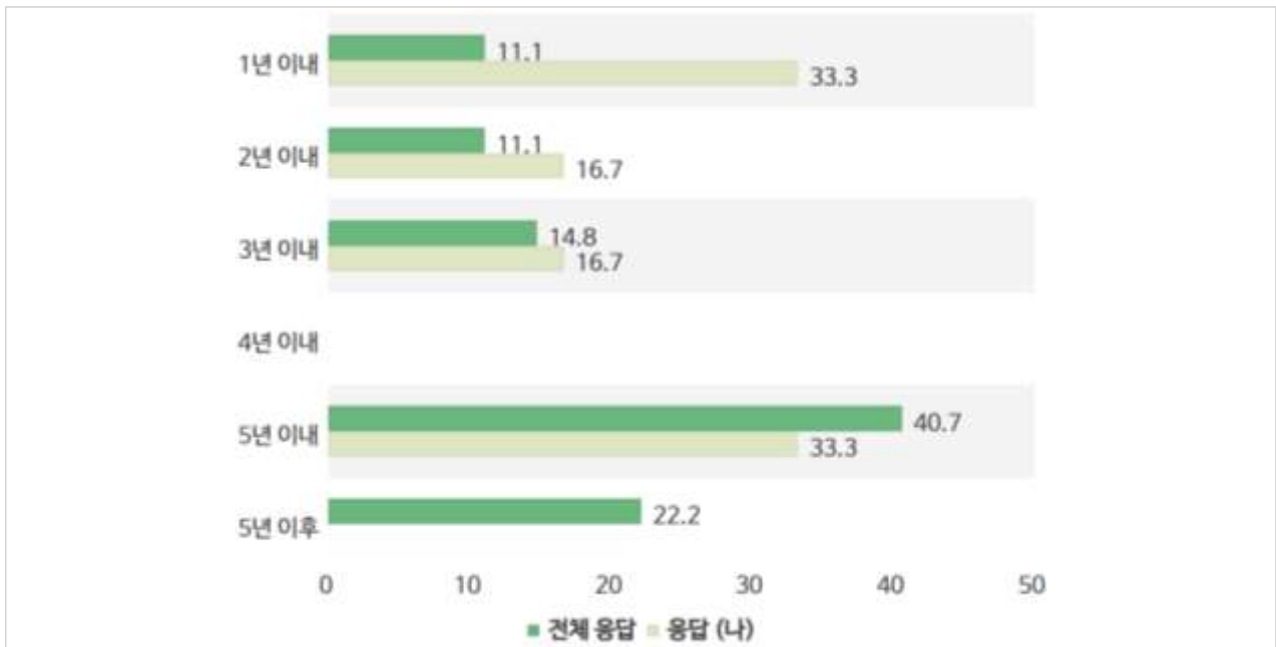
전환 예정 시기	2년 이내	3	11.1	1	16.7
	3년 이내	4	14.8	1	16.7
	4년 이내	0	0.0	0	0.0
	5년 이내	11	40.7	2	33.3
	5년 이후	6	22.2	0	0.0

* 응답자는 총 27명이었다.

** 응답자 중 '귀하께서 A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5년을 대비하여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전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질문에 '평사실내사육 등 동물복지인증으로 전환'을 선택한 7명을 '응답 (나)'로 규정하여 별도로 응답을 살펴보았다.

[그림 2-42] 동물복지농장 전환 예정 시기

(단위: 비율(%))



- '귀하가 전환하고자 하는 동물복지 방식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복지형 개방 케이지(에이비어리)'가 60.7%로 가장 많았고, '실내평사사육'이 25.0%, '방사사육'이 14.3%를 기록했다.
- '응답 (나)'의 경우 '복지형 개방 케이지(에이비어리)'와 함께 '실내평사사육'도 각각 42.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방사사육은 '전체 응답'과 같은 14.3%를 기록했다.

[표 2-51] 전환하고자 하는 동물복지농장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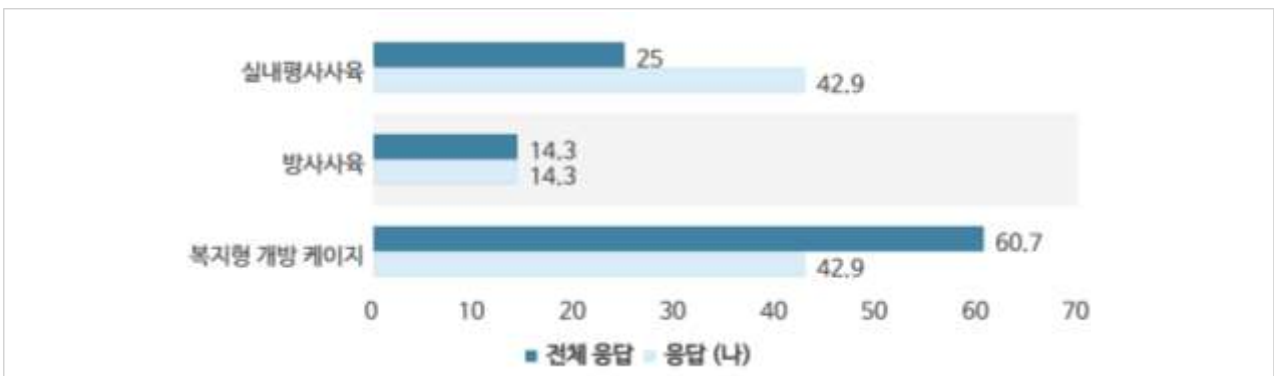
조사항목		전체 응답*		응답 (나)**	
		N	비율(%)	N	비율(%)
전체		28	100	7	100
전환하고자 하는 동물복지농장 방식	실내평사사육	7	25.0	3	42.9
	방사사육	4	14.3	1	14.3
	복지형 개방 케이지 (에이비어리)	17	60.7	3	42.9

* 응답자는 총 27명이었고, 1명이 복수 응답하였다.

** 응답자 중 '귀하께서 A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5년을 대비하여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전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질문에 '평사실내사육 등 동물복지인증으로 전환'을 선택한 7명을 '응답 (나)'로 규정하여 별도로 응답을 살펴보았다. '응답 (나)'에서도 1명이 복수 응답하였다.

[그림 2-43] 전환하고자 하는 동물복지농장 방식

(단위: 비율(%))



-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가 46.9%를 차지했고, 이어서 '동물복지 필요성에 공감해서'와 '수익성이 괜찮을 것 같아서'가 각각 18.8%를 기록했다. '정부의 정책 등 외부의 압박이 느껴져서'는 15.6%였다.
- '응답 (나)'의 경우에도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가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동물복지 필요성에 공감해서'도 33.3%로 '전체 응답'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수익성이 괜찮을 것 같아서'와 '정부의 정책 등 외부의 압박이 느껴져서'는 각각 11.1%였다.
- 2025년 사육면적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정책적 외부 요인은 가장 적게 선택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지금 단계에서 동물복지농장 전환을 결심하는 응답자의 경우, 사회변화에 대한 자발적 호응 움직임이나 동물복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내재적 동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전환 의지를 드러내는 응답자들의 경우 동물복지의 필요성에도 더 높은 공감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2-52] 동물복지농장 전환 결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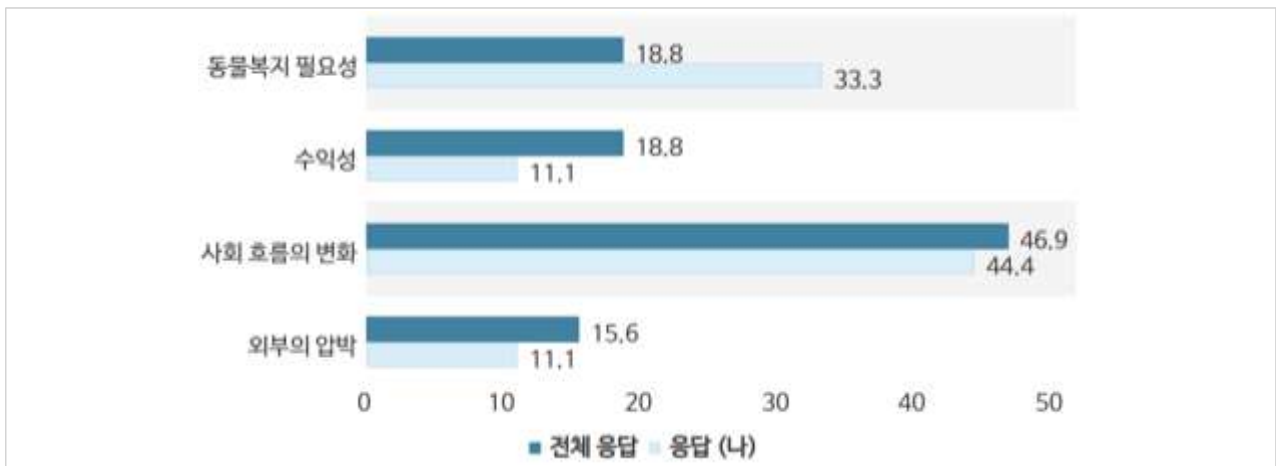
조사항목		전체 응답*		응답 (나)**	
		N	비율(%)	N	비율(%)
전체		32	100	9	100
동물복지농장 전환 결심 이유	동물복지 필요성에 공감해서	6	18.8	3	33.3
	수익성이 관찮을 것 같아서	6	18.8	1	11.1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15	46.9	4	44.4
	정부의 정책 등 외부의 압박이 느껴져서	5	15.6	1	11.1

* 응답자는 총 27명이었고, 4명이 복수 응답하였다.

** 응답자 중 '귀하께서 A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5년을 대비하여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전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질문에 '평사실내사육 등 동물복지인증으로 전환'을 선택한 7명을 '응답 (나)'로 규정하여 별도로 응답을 살펴보았다.

[그림 2-44] 동물복지농장 전환 결심 이유

(단위: 비율(%))



-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으로는, '축사 개조에 드는 초기 비용'이 36.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허가 절차 등 행정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상의 문제'가 18.2%, '노동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문제'가 14.5%, '공시 가격 부재, 판로 확보 어려움 및 유통 문제'가 12.7%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 '응답 (나)'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축사 개조에 드는 초기 비용'과 '허가 절차 등 행정상의 문제'로 36.4%와 27.3%였다. '응답 (나)'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의 경우는 '전체 응답'과는 달리 18.2%를 점유한 '산란계 관리, 방란 등의 운영 문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2-53] 동물복지농장 전환 시 예상되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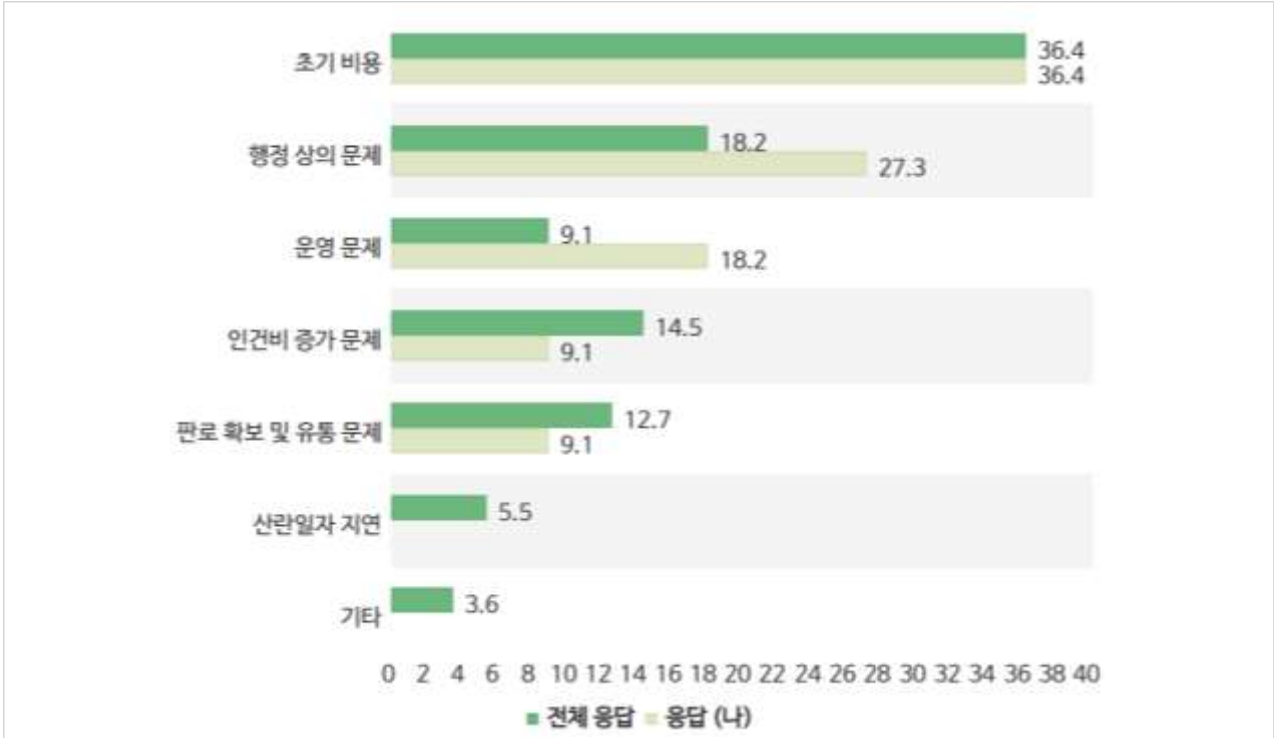
조사항목		전체 응답*		응답 (나)**	
		N	비율(%)	N	비율(%)
전체		55	100	11	100
동물복지농장 전환 시 예상되는 어려움	축사 개조에 드는 초기 비용	20	36.4	4	36.4
	허가 절차 등 행정상의 문제	10	18.2	3	27.3
	산란계 관리, 방란 등 운영 문제	5	9.1	2	18.2
	노동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문제	8	14.5	1	9.1
	공시 가격 부재, 판로 확보 어려움 및 유통 문제	7	12.7	1	9.1
	출하량 감소로 인해 산란 일자가 일주일 이상으로 지연되는 문제	3	5.5	0	0.0
	기타	2	3.6	0	0.0

* 응답자는 총 34명이었고,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다.

** 응답자 중 '귀하께서 A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5년을 대비하여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전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질문에 '평상실내사육 등 동물복지인증으로 전환'을 선택한 7명을 '응답 (나)'로 규정하여 별도로 응답을 살펴보았다.

[그림 2-45] 동물복지농장 전환 시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비율(%))



-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동물복지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3가지 선택하여 순위를 매기게 하였을 때 ‘전체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41.4%)이 ‘동물복지인증에 필요한 초기 시설비 보조(예: 철거 및 신축, 난상, 햇대 등)’를 1순위로 꼽았으며, 2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동물복지란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공시 가격 제도’(32.0%)였다.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판로 확보 지원(예: 소형 농장을 위한 전용 유통망 혹은 협동조합 등)’(52.4%)였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응답자들이 동물복지란의 안정적 판로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 가능 여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응답 (나)’의 선택의 경우 1순위가 초기 시설비 보조가 아닌 초기 저금리 대출(42.9%)이었고, 2순위는 ‘전체 응답’과 같은 공시 가격 제도(42.9%)였다. 3순위의 경우 공시 가격 제도와 판로 확보 지원이 같은 비율(28.6%)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표 2-54] 동물복지 전환 시 필요한 지원 순위

응답 항목	전체 응답 비율(%)*			응답 (나)(%)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동물복지인증에 필요한 초기 시설비 보조 (예: 철거 및 신축, 난상, 햇대 등)	41.4	4.0	4.8	28.6	14.3	14.3
동물복지인증에 필요한 초기 시설비 대상 저금리 대출	13.8	20.0	14.3	42.9	14.3	14.3
직불제 실시	10.3	8.0	0.0	0.0	0.0	0.0
세제 혜택	13.8	12.0	0.0	14.3	14.3	0.0
사육관리 편의를 위한 교육	6.9	4.0	0.0	0.0	0.0	0.0
전환 과정에 있어 행정편의 제공	6.9	8.0	4.8	14.3	14.3	14.3
동물복지란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공시 가격 제도	3.4	32.0	19	0.0	42.9	28.6
(연례 합의 등을 통한) 최저가격 보장제	0.0	12.0	4.8	0.0	0.0	0.0
판로 확보 지원 (예: 소형 농장을 위한 전용 유통망 혹은 협동조합 등)	3.4	0.0	52.4	0.0	0.0	28.6
기타	0.0	0.0	0.0	0.0	0.0	0.0

* 전환에 필요한 지원 순위 조사에는 1순위 29명, 2순위 25명, 3순위 21명이 참여하였다.

4) 영업 승계 혹은 폐업하려는 경우

- 2025년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 예정에 대한 질문에 ‘영업 승계 혹은 폐업하려는 경우’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문항에는, 해당 응답자 15명뿐 아니라 다른 응답자들의 참여도 있었다. 아래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모든 응답인 ‘전체 응답’과 ‘영업 승계 혹은 폐업하려는 경우’를 선택한 15명의 응답자의 응답을 ‘응답 (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귀하께서는 영업 승계 혹은 폐업을 고려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선택된 응답은 ‘연령상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였으며, 54.5%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축사로 전환할 자금상의 여건이 안 되어서’가 18.2%,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전환할 자금상의 여건이 안 되어서’가 13.6%, ‘2025년의 사육면적 확대 조치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서’가 9.1%로 나타났다.

- ‘영업 승계 혹은 폐업하려는 경우’를 선택한 15명의 응답인 ‘응답 (다)’를 살펴보면, 역시 ‘연령상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가 50.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현대축사로 전환할 자금상의 여건이 안 되어서’가 25.0%였다.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전환할 자금상의 여건이 안 되어서’와 ‘2025년의 사육면적 확대 조치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서’는 각각 12.5%를 차지했다.

[표 2-55] 영업의 승계 혹은 폐업 고려 이유

조사항목		전체 응답*		응답 (다)**	
		N	비율(%)	N	비율(%)
전체		22	100	8	100
영업의 승계 혹은 폐업 고려 이유	현대축사로 전환할 자금상의 여건이 안 되어서	4	18.2	2	25.0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전환할 자금상의 여건이 안 되어서	3	13.6	1	12.5
	2025년의 사육면적 확대 조치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2	9.1	1	12.5
	연령상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12	54.5	4	50.0
	승계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를 요청해서	0	0.0	0	0.0
	기타	1	4.5	0	0.0

* 응답자는 총 18명이었다.

** 응답자 중 ‘귀하께서 A형 케이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5년을 대비하여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전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질문에 ‘영업 승계 혹은 폐업’을 선택한 15명을 ‘응답 (다)’로 묶어 별도로 응답을 살펴보았다.

- 이 문항에서 ‘연령상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라고 응답하면서 연령을 밝힌 응답자의 평균나이는 67.2세였으며, ‘응답 (다)’에서 밝힌 연령의 평균나이는 68.5세였다.

[표 2-56] ‘연령상 은퇴할 나이’ 연령 평균값

조사항목	평균값
연령상 은퇴할 나이 (전체 응답)	67.2세 (N=6)
연령상 은퇴할 나이 (응답 (다))	68.5세 (N=2)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 ‘폐업을 하지 않고 (혹은 영업 승계 시 기존 시설을 바꾸도록 하고)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전환하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동물복지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3가지 선택하여 순위를 매기게 하였을 때 ‘전체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43.8%)이 ‘동물복지인증에 필요한 초기 시설비 보조(예: 철거 및 신축, 난상, 햇대 등)’를 1순위로 꼽았으며, 이 항목은 2순위 조사에서도 ‘동물복지인증에 필요한 초기 시설비 대상 저금리 대출’와 함께 각각 28.6%를 차지하여, 해당 응답자들은 초기 시설비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었다.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28.6%를 차지한 ‘(연례 합의 등을 통한) 최저가격 보장제’였다.
- ‘응답 (다)’를 살펴보면, 1순위는 초기 시설비 보조와 행정편의가 같은 비율(40.0%)로 선택되었고, 2순위는 초기의 시설비 보조와 저금리 대출, 직불제, 세제 혜택, 최저가격 보장제가 같은 비율(20.0%)을 차지했다. 3순위의 경우 최저가격 보장제(40.0%)가 가장 큰 비율로 선택되었다.

[표 2-57] 폐업하지 않고 혹은 승계 시 동물복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 순위

응답 항목	전체 응답 비율(%)*			응답 (다)(%)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동물복지인증에 필요한 초기 시설비 보조 (예: 철거 및 신축, 난상, 햇대 등)	43.8	28.6	0.0	40.0	20.0	0.0
동물복지인증에 필요한 초기 시설비 대상 저금리 대출	12.5	28.6	14.3	0.0	20.0	20.0
직불제 실시	12.5	14.3	7.1	20.0	20.0	0.0
세제 혜택	6.3	7.1	21.4	0.0	20.0	20.0
사육관리 편의를 위한 교육	0.0	0.0	0.0	0.0	0.0	0.0
전환 과정에 있어 행정편의 제공	12.5	14.3	14.3	40.0	0.0	0.0
동물복지란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공시 가격 제도	12.5	0.0	7.1	0.0	0.0	0.0
(연례 합의 등을 통한) 최저가격 보장제	0.0	7.1	28.6	0.0	20.0	40.0
판로 확보 지원 (예: 소형 농장을 위한 전용 유통망 혹은 협동조합 등)	0.0	0.0	7.1	0.0	0.0	20.0
기타	0.0	0.0	0.0	0.0	0.0	0.0

* 전환에 필요한 지원 순위 조사에는 1순위 16명, 2순위 14명, 3순위 14명이 참여하였다.

마.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1) 대한산란계협회 임원 인터뷰

- 대한산란계협회 임원들은 2025년에 정부가 사육면적 확대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산란계 생애주기가 총 1.5년 정도임을 고려할 때, 2025년 9월 도입을 앞두고 2024년 3월부터 바로 사육두수가 조정되어야 할 텐데, 정부가 이제 축산과학원을 통해 겨우 파악을 시작하고 있다며 준비가 미비해 보인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정부는 ‘7년의 시간을 줬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 2025년 사육면적 확대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매출 하락과 출하 시기 감소로 인한 생산 일자 이슈를 제기하였다.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로 매출이 50~70%로 줄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되는 달걀의 수가 줄어들면서 출하량이 줄어들에 따라 생산 일자가 길어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A형뿐 아니라 H형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많은 농장의 폐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달걀 수급 문제도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다. 하루 4,500만 개씩 출하되던 것이 예를 들어 3,500만 개로 줄어든다면 수입으로 채우게 될 텐데 이는 세금 낭비이고, 신규 유입도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AI까지 발생하게 되면 주변국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일본, 중국, 태국 등의 수혜만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동물복지농장 전환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동물복지란 선호로 판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고려하는 농장주들이 있지만, 소비자들의 지불 의향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동물복지란 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일반란 가격에 출하하게 되면서 동물복지농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정부에 가격 안전보장, 생산 및 출하 일자 연장을 요구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한편 6천원 선의 가격 보장과 주 2회 출하가 가능한 물류 시스템 지원, 또는 주 1회 출하로도 원활한 판매가 가능한 판로가 확보되어야 정부의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 포천지부

-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 포천지부 소속 농장주들은, 2025년 사육면적 확대 시 정부의 정책 강행으로 농장주들이 과태료나 벌금을 물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나이대가 있는 농장주분들은 ‘설마 진짜 하겠어?’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비해 이에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A형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의 경우 2~3마리 들어가던 케이지에 1마리가 들어가게 되면 겨울에 닭들의 체온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기 또한 어려워지는 연쇄적 상황 속에서 2025년 겨울 많은 폐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 동물복지농장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동물복지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반란이 복지란으로 둔갑하는 문제라던가 복지란에 대한 가격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아 유통 상인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문제, 복지형 농장 운영 기술의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최근 복지란 가격 하락 등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면 강제적 정책이 없어도 농장주들이 자발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달걀 수급량에 대해서는, 25년 9월 이후 단기적으로는 부족분 발생하여 수입으로 채우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현재 사육두수 7~8천만 정도 되지만 입식가능수(시설 capacity)는 1억수를 넘겼다. 경상도 쪽에 ‘어마어마하게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일부 농장들의 대형화 추세로 공급량은 문제없는 것으로 예측했다.
- 농장주들은 대체로 2025년을 대비할 여력이 없으며 0.075㎡로 전환하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책이라는 입장이었다.

바. 소결

- ‘2023 전국산란인대회’에 참석한 산란계 농장주 112인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는 50~60대(63.4%)의 남성(73.2%)이 많았으며, 경상북도(19.8%), 충청남도(13.8%), 경기도(12.9%) 등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5.7%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응답자들이 운영하는 농장의 케이지 유형 및 사육밀도는 ‘H형 직립식 무창계사(0.05㎡/마리)’가 66.2%, ‘H형 직립식 무창계사(0.075㎡/마리)’가 18.1%, ‘A형 계사(0.05㎡/마리)’가 15.7%였으며, 응답자 중 A형 계사보다는 H형 직립식 무창계사를 운영하는 농장주들의 비율이 높았다.
- 응답자들이 운영하는 농장의 입식 가능 두수는 ‘5만 초과 ~ 10만 이하’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만 이하’ 28.6%, ‘10만 초과 ~ 15만 이하’가 8.0%, ‘30만 초과’가 4.5%, 그리고 ‘20만 초과 ~ 25만 이하’, ‘25만 초과 ~ 30만 이하’가 각각 3.6%를 차지하였다. 평균 사육두수는 123,421.1마리로 조사되었고, 사육 두수 합계에서는 응답자의 4.5%에 불과한 ‘30만 초과’ 농장이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8.0%를 차지하여, 산란계 농장의 대형화 추세를 보여주었다.
- 케이지의 경우, 설치 시기는 ‘5년 초과 ~ 10년 이내’ 34.5%, ‘10년 초과 ~ 15년 이내’ 23.5%, ‘5년 이내’ 16.8%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으며, 케이지 교체 주기의 경우 ‘약 20년’이 34.3%, ‘20년 이상’이 33.3%로 조사되어, 대체로 20여년 이상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지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47.9%가 국내산, 43.6%가 유럽산, 4.3%가 기타 수입산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유럽은 자국 내에서는 케이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회원국들은 케이지 사용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 상당한 비율의 케이지를 공급하고 있었다.
-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해서는, 산란율과 일일생산량이 각각 평균 86.2%, 89,384.2개로 조사되었다. 산란율 조사에서는 85~90%라는 응답이 72.6%를 차지했고, 일일생산량의 경우 ‘5만 초과 ~ 10만 이하’가 42.3%, ‘5만 이하’가 32.4%였다. 출하 횟수 및 회당 출하 규모의 경우 매주 평균 3,566.4판씩 4.9회 출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만 수 사육시설 기준 매주 1,849.3판, 55,479란을 출하하는 셈이었다. 주 판로는 ‘중개상’이 50.0%, ‘지역 소매업체’가 26.9%, ‘대기업’이 10.4%를 차지했고, 거래 유통업체 수는 평균 3.9곳이었다.
- 2023년 5월 중순의 난당 가격 및 희망 가격에 대한 조사 결과, 난당 가격은 148.5원이었으며, 응답자들이 밝힌 희망 가격은 그보다 30% 인상된 193.0원이었다.
- 영업 계기 및 지속 여부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47.3%는 초대 창업주, 34.8%는 부모의 영업을 물려받은 2대 업주였고, 과반 이상인 63.4%가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었다. 향후 운영 예상 기간에 대해서는 55.4%가 20년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영업 승계 계획에 대해서는 67.0%가 ‘자녀에게 승계 계획이 있음’이라고 밝혔고, ‘향후 폐업을 계획하고 있음’이라는 응답은 13.6%였다. 농장 승계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자식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아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서'가 45.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영업의 지속을 위한 농장의 최소 연소득에 대해서는 1만수 사육시설 기준 평균 101,409,863.2원의 순수 소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한편, 응답자의 42.9%가 '환우 후 생산 유지'를, 36.6%가 '환우 전 도계 진행'을, 24.1%가 '부리다듬기'를, 16.1%가 '카니발리즘'을 시행하거나 발견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미 동물복지형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9.9%였다.
-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입장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국내 산란산업의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를 평균 4.3점/10점 정도 체감하며, 직접 동물을 관리하는 업주로서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에 공감하는 정도는 평균 4.1점/10점이라고 밝혔다. 향후 동물복지 농장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7.5%,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2.1%였고, 동물복지농장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향후 동물복지농장의 비율이 낮아지는 방향보다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대체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는 '동물복지 관련 정책으로 인하여 규제가 강화됨'(41.5%),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됨'(38.3%)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동물복지 농장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로는 막대한 초기 비용(26.4%), 운영상의 높은 난이도(22.6%), 그만큼의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20.8%)이라고 응답했다.
- 응답자들은 동물복지농장 전환 시 초기 비용으로 1만 수 사육시설 기준 평균 4.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동물복지란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평균 387.3원이라고 응답하여 2023년 5월 산지값인 168.9원에서 129.3% 인상을 희망하였다.⁷⁾
- 업계의 여러 변화 요인과 관련하여 농장주로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수입을 통한 정부의 가격 조정'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6.2%를 차지한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였다.
- 2025년의 사육면적 확대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0.4%는 알고 있다고 답했고, 52.7%는 사육면적 확대에 '현재 대비 50% 이상, 75% 미만 감소'를 요구받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사육두수는 20~40% 감소한다는 응답이 65.2%에 달하였으며, 달걀생산원가 변화의 경우 '20~30% 증가' 25.0%, '30~40% 증가' 19.6%, '40% 이상 증가'가 15.2%로 응답하였다.
- 응답자들은 사육면적이 확대되면, '사육두수 감소와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영난'(33.3%), '겨

7)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2023년 5월 한 눈에 보는 계란 유통 동향, 2023.12.21.접근,
<https://www.ekapepia.com/poultry/poultryTrendStats.do>

울철 사육 적정 온도 유지 어려워 폐사 증가'(18.3%), '겨울철 온도 유지 및 환기가 어려워서 호흡기 질병 발생'(17.8%), '겨울철 급수시설 동파 등의 문제로 급수, 급이에 문제 발생'(13.3%)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사육면적 확대의 장기적 영향으로는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지만, 수입증가로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가 과반에 가까운 4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가 미리 수입 등으로 대비책을 내놓아 가격변화가 없을 것이다'가 20.4%, '사육면적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로 국내산은 가격 상승하고 저가는 수입산으로 대체할 것이다'가 17.3%,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 수익이 확대될 것이다'가 8.2%를 차지했다.

- 2025년에 대해 응답자들의 46.5%는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따를 예정이지만 유예기간을 더 요구한다'라는 상황을 예상하였다. '사육면적 확대 조치에 따라 시설이나 운영 방식을 그때까지 바꾼다'는 23.2%, '사육면적 확대 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18.2%를 차지했다. 2025년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정부가 유예기간을 더 줄 것이다'가 35.7%, '정부가 곧 강제조치를 실시하여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다'가 34.8%였다.
- 운영 중인 직립식(H형) 케이지 농장의 운영 방식 전환에 대한 질문에 '현재 사육규모 변화 없이 주변 상황을 지켜본다'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고, '사육밀도 확대를 지키고 규모가 적은 다단형 케이지시설 교체(사육두수가 덜 감소하도록)'가 21.2%, '사육밀도 확대를 지키고 줄어든 수수를 보충하기 위해 육계나 육용종계등 타 농장을 구매하여 산란계 직립식 케이지로 전환'이 18.8%였다.
- 운영 중인 A형 케이지 농장의 운영 방식 전환에 대한 질문에는 '영업 승계 혹은 폐업'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H형) 전환이 35.3%,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전환이 20.6%였다. A형 케이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34명으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2023 전국산란인대회'의 참석자 중 A형 케이지를 운영하는 농장주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 A형 케이지를 다단형 직립식 케이지(H형)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12명의 경우, 그 이유로 '케이지 사육방식이 동물복지농장보다 관리가 더 용이해서'(36.4%), '동물복지 사육방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혹은 잘 몰라서)'(18.2%), '동물복지 사육방식의 운영이 부담되어서'(18.2%) 등을 들었다.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동물복지인증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은 50.0%였고, '먼 미래에 정부의 정책이 모든 농장에 동물복지인증을 요구할 거라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5.6%,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4.4%를 차지했다.

- A형 케이지를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7명의 경우, 전환 예정 시기는 '1년 이내'와 '5년 이내'가 각각 33.3%를 기록했고, 전환하려는 방식에 대해서는 42.9%는 '복지형 개방 케이지(에이비어리)', 그와 같은 비율이 '실내평사사육', 14.3%는 '방사사육'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가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동물복지 필요성에 공감해서'가 33.3%, '수익성이 괜찮을 것 같아서'와 '정부의 정책 등 외부의 압박이 느껴져서'가 각각 11.1%였다. 2025년 사육면적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정책적 외부 요인은 가장 적게 선택하였고, 사회변화에 대한 자발적 호응 움직임이나 동물복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내재적 동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전환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은 초기 비용이 36.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행정적 문제 27.3%, 운영 문제가 18.2%로 응답하였다.
-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에 대해 '영업 승계 혹은 폐업'을 선택한 15명의 경우, 선택의 이유에 대한 응답은 '연령상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가 50.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현대축사로 전환할 자금상의 여건이 안 되어서'가 25.0%,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전환할 자금상의 여건이 안 되어서'와 '2025년의 사육면적 확대 조치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가 각각 12.5%였다. 이 문항에서 '연령상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라고 응답하면서 연령을 밝힌 응답자의 평균나이는 68.5세였다.
- A형 케이지의 운영 방식 전환에 대한 질문과 함께 동물복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설문하였는데,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한다고 대답한 것은 초기의 시설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 또는 저금리 대출이었다. 이 외에 판로 확보, 최저가격보상제 등도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3. 결론 및 제언

- 2025년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앞두고, 케이지프리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업계의 호응과 노력 역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가. 케이지프리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캠페션 인 월드 파밍(Compassion in World Farming International, CIWF)에 따르면,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Chatham House)는 식량시스템의 전환이 더 이상 기업들의 선량한 의지, 개인 시민들의 자발적 관심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사기업의 영역'에 대한 개입을 회피하는 방관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책과 규제, 세금 부과나 재정 지원 등의 재무적 도구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 개입하고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⁸⁾
- 실제로 2016년,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육류 소비를 5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대 육류 소비국이자 수입국으로, 최근 대규모 육류 섭취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추세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육류 섭취량을 줄여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할 것을 발표하였다.⁹⁾
- 또한 미국 워싱턴에서는(주민 투표를 통해 배터리케이지 금지법이 통과된 일부 다른 주와는 달리)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케이지사육 금지 및 케이지사육 달걀 유통 금지를 이루어 낸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제적인 전략 및 개입을 통해 변화를 추동해야 할 때이다.¹⁰⁾

8) Compassin in World Farming. Turning the Food System Round - The role of government in evolving to a food system that is nourishing, sustainable, equitable and humane. 2019.
<https://www.ciwf.org.uk/media/7436369/how-to-transition-to-a-nourishing-sustainable-equitable-and-humane-food-system-2019.pdf>

9) 농림축산식품부. 중국, UAE, 호주 육류대체식품 및 채식식품 시장현황, 2018. 10.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87376&menu_dept=49&dateSearch=&reportSearch=

10) Egg-laying hens live in horrific conditions. Washington state just passed a law to change that, Vox, Kelsey Piper, 2019.05.10.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5/10/18564455/washington-jay-inslee-hens-animal-cruelty>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 더구나 최근 유럽연합이 탄소누출(Carbon Leakage)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후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2023년 5월 16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발효하여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유럽이 축산물 거래 시 자신들의 동물복지 기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도 전무하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¹¹⁾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뛰어난 영양공급원을 충분히 공급할 뿐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미래지향적 식량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배터리케이지는 유럽연합과 미국 일부 주를 필두로 금지 추세에 들어섰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질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기초를 확실히 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우선 배터리케이지, 개선형케이지 등의 케이지사육의 신설을 금지하고 케이지프리 비율을 높여나가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선형케이지와 같이 여전히 닭을 감금하는 방식을 중간단계로 채택함으로써 케이지프리 전환 속도를 늦추고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동물복지 축산으로 농장주들을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 특히, 법과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일선 농장주들의 인식 개선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 문화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농장주들의 긍정적 태도를 증진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축산업계에 요구되는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참여시키고,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당사자들의 합의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농장경영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동물복지인증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제공하거나, 동물복지인증농장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운영의 노하우와 보완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자체 내 공중방역수의사를 활용하여 동물복지인증농장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케이지프리 확산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의 축산물 소비를 권장하는 시민 대상 홍보와 교육 역시 필요하다.
- 가장 시급한 구체적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1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ext with EEA relevance), 2023.5.16. <http://data.europa.eu/eli/reg/2023/956/oj>

1) 케이지사육의 단계적 금지

가) 케이지사육 신규 진입 및 증설 금지

- 해외에서는 케이지프리로 전면 전환하기에 앞서 신규 유입을 막는 방식의 단계를 먼저 거치고 있음을 참고할 때 케이지사육의 단계적 금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신규 업자들이 배터리케이지, 개선형 케이지 등 케이지사육 방식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 또한 시설 증설 및 사육규모 확대를 원하는 농장주의 경우 새로운 시설을 케이지프리로만 증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케이지사육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케이지사육 달걀 수입·판매·유통 금지

- 케이지사육의 규모를 위축시키고,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케이지사육 신규 진입 금지 조치가 요구되어진다. 케이지사육의 비율이 줄어들고 동물복지형으로의 전환 의지가 다수 확인되는 시점인 만큼, 케이지사육 방식을 통해 생산된 달걀의 수입·판매,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 이는 사회적으로 케이지사육 방식을 축출하고, 동물복지 축산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요구이자 선언으로서의 의미가 크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동물복지형으로 아직 전환하지 못한 농가들이 케이지사육 달걀의 판매가 금지되는 시점 이전까지 주어지는 수년의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사육방식을 바꾸도록 할 수 있다.
- 동물복지형 사육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 혹은 산란계 축산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재정비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육 농가 수와 사육두수가 줄어들면서 공급과잉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달걀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식품기업 역시 케이지프리 달걀 사용을 늘려 가는 움직임에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케이지프리 농가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어 시설재투자 및 케이지프리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 지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동물복지 제고뿐 아니라 한국의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투자이며, 2022년도에 8조원을 넘어선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집행에서 케이지프리 관련 지원을 적극 편성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케이지프리 촉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¹²⁾
- 특히 케이지프리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시설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축사 개조에 드는 초기 비용’이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동물복지농장 전환을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역시 초기의 시설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 또는 저금리 대출이었다. 이를 통해 케이지프리로의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초기 비용 지원’일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조금 또는 저금리 대출 계획이 시급하다.
- 특히 축사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규모 일반농장이나, 노후로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일반농장의 경우 동물복지인증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설득과 시설 지원이 최대한 빨리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문에서 ‘케이지 교체 주기’에 대한 질문 결과, 교체 주기는 약 2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매우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 케이지를 또 다른 배터리케이지로 교체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축산방식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으로의 진일보를 지연시키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축사현대화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축산업 지원 예산을 케이지 교체 시기가 도래한 산란계 농가에 케이지프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이에 더하여 기존의 농장경영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동물복지인증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물복지를 전제조건으로 산란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일 것이다.

12)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현황, 김문석, 2023.01.30.
https://www.mafra.go.kr/sn3hcv_v2023/skin/doc.html?fn=BE1731F9-2BD6-ECFA-6F94-DBE75B3F82.xlsx&rs=/sn3hcv_v2023/atcmmnfl/bbs/202311/

3) 사육환경표시제 기준 및 홍보 강화

- 현재 케이지프리 달걀의 경우 달걀껍질의 일련번호 끝자리에 1(방목) 또는 2(평사)를 표기하여 사육환경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경우 달걀 포장재에 ‘동물복지인증’ 라벨을 달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복지인증’ 라벨이 다른 인증 라벨과 크기, 색상 면에서 유사하여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동물복지인증’ 라벨만으로는 해당 달걀이 평사인지, 방목인지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 이에 식품광고표시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7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개정을 통해 달걀껍질 뿐 아니라 달걀 포장재에도 달걀 사육환경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달걀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¹³⁾

현행 사육환경표시제 개정 방향
<p><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p> <p>◎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7호 식품 등의 표시기준</p> <p>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 1. 식품 - 처. 식용란 (수입식용란을 포함한다)</p> <p>1) 표시사항 - 가) 최소포장단위 (표시의무자: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p> <p>→ 달걀 껍질 뿐 아니라 ‘최소포장단위’에도 사육환경을 번호 혹은 로고로 표시하도록 개정</p>

- 또한 최근 한 농장동물 복지 인식 조사에서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4%였지만, 사육환경표시제를 안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음을 고려할 때¹⁴⁾, 사육환경표시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한 규정을 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01.01.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3687#0000>

14) 윤상준, 농장동물복지 중요해 94%, 계란 사육환경표시 안다 27%, 복지란 산다 7%, 데일리벳, 2023.03.20.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82643>

4)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련 정책 정비

-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25년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조치는 그러한 방향에 맞는 조치이지만, 실행 준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일선 농장주들의 지적이 있는 부분을 고려할 때, 경제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 및 발굴하고 그 도입 가능성을 일선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농장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관련 연구 진행

- 2025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한 순응을 포함하여,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식량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정에서는 일선의 농장주들이 그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사업모델 및 시나리오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배터리카이지 실태 파악 및 전환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국의 A형 농장의 수와 해당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산란계의 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 대한 정보와 거버넌스 체계가 확보하여 2025년 사육면적 확대가 무사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케이지프리 전환 촉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

1) 시민(소비자)의 의식적, 윤리적, 정치적 소비

- 이제 시민들이 고기를 ‘건강과 부의 상징’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많은 시민이 대규모 육류, 유제품, 달걀 소비 뒤에 가려진 동물학대의 문제에 눈을 뜨고 있으며, 동물의 무지막지한 희생을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하는 거대한 축산업 카르텔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지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양에서 저소득층일수록 극단적 동물학대의 결과로 값싸게 공급되는 육류 위주로 음식을 섭취하고, 이에 따라 비만과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는 추세가 확인될 만큼¹⁵⁾, 이제 동물 관련 소비는 양적 성장의 일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육류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다.

- 다양한 형태의 채식 등 시민들의 심화되는 문제의식은 ‘윤리적 소비’와 궤를 같이하는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에 보다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그것이 여러 통로를 통해 가시화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케이지프리로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민단체의 캠페인

- 시민단체의 캠페인은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가시화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이다. 정부들의 연합체인 국제기구(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국내의 경우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해외의 경우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 컴패션 인 월드 파밍(Compassion in World Farming International, CIWF),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HSUS),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SPCA),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PETA) 등이 연대활동에 이르기까지 케이지프리를 확산하고 산란계 동물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 케이지프리 전환 촉진을 위한 업계의 노력

- 축산업 시설은 상당 규모의 투자를 요하는 분야인 만큼, 업주입장에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작금에는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요구를 반영하고 외국의 선진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동물복지 전환의 주요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이 농장주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전환적 국면에서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때로는 필요한 지원을 정부로부터 유치하면서 케이지프리를 향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업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15) Żukiewicz-Sobczak, W., Wróblewska, P., Zwoliński, J., Chmielewska-Badora, J., Adamczuk, P., Krasowska, E., Zagórski, J., Oniszczyk, A., Piątek, J., & Silny, W., Obesity and poverty paradox in developed countries. *Annals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 AAEM*, 21(3), 590-594. 2014. <https://doi.org/10.5604/12321966.1120608>

●●● 산란계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설문조사

- 이 조사에서 향후 동물복지농장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으며, 이는 농장 주들도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2021년에 대한양계협회 채란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향후 조건이 맞는다면 동물복지농장으로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4.4%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실질적인 동물복지 제고로 이끌어낸다면, 산란업계의 큰 역할과 전향적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인정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동물복지축산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할 이해관계자로서의 초대에 산란업계 업주들이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

4.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 '2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2023.06.13.
<https://www.qia.go.kr/downloadwebQiaCom.do?id=44561>

-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은환 외, 경기연구원, 2017.09.
<https://www.gri.re.kr/web/contents/resreport.do?schM=view&schPrjType=ALL&schProjectNo=5456&schBookResultNo=8521>

- 농림축산식품부. 중국, UAE, 호주 육류대체식품 및 채식식품 시장현황, 2018. 10.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licationView.do?board_seq=87376&menu_dept=49&dateSearch=&reportSearch=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현황, 김문석, 2023. 01. 30.
<https://www.mafra.go.kr/home/5023/subview.do>

- (사)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3.
<https://www.aware.kr/wp-content/uploads/2023/03/AWARE-2022-농장동물-복지에-대한-국민인식조사.pdf>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3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II. 2023.
<https://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2f092f35-4808-48b8-9222-246efd22e6b3>

- 황주영, 채식을 생각하는 또 다른 관점: 에코페미니즘과 동물산업복합체, 카라 자료집, 2015.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2023년 5월 한 눈에 보는 계란 유통 동향, 2023.12.21.접근, <https://www.ekapepia.com/poultry/poultryTrendStats.do>

- 강보원. [통상자문센터] 통상규제 이슈 브리핑: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이행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 지평. 2023.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395&page=&value=&type=&nownum=1
- 박준하, 공멸이냐, 공존이냐... 갈림길에 선 양계농가, 농민신문. 2019.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5376244&memberNo=36080930>
- 윤상준, 농장동물복지 중요해 94%, 계란 사육환경표시 안다 27%, 복지란 산다 7%, 데일리벳, 2023.03.20.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82643>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동향조사」, 닭 시도/사육규모별 가구수 및 마리수, 2023.02.0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0061&conn_path=I2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동향조사」, (산란계) 닭 시도, 월령별 마리수, 2023.02.0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0415&conn_path=I2

나. 해외문헌

- Clatici, V. G., Voicu, C., Voaides, C., Roseanu, A., Icriverzi, M., & Jurcoane, S., Diseases of Civilization - Cancer, Diabetes, Obesity and Acne - the Implication of Milk, IGF-1 and mTORC1. *Maedica*, 13(4), 273-281. 2018.
<https://doi.org/10.26574/maedica.2018.13.4.273>
- Compassin in World Farming. Turning the Food System Round - The role of government in evolving to a food system that is nourishing, sustainable, equitable and humane. 2019.
<https://www.ciwf.org.uk/media/7436369/how-to-transition-to-a-nourishing-sustainable-equitable-and-humane-food-system-2019.pdf>

- Garnett et al, Policies and actions to shift eating patterns: What works? Chatham House and Food. Climate Research Network. 2015.
https://tabledebates.org/sites/default/files/2020-10/fcrn_chatham_house_0.pdf
- Medical News Today. Obesity and poverty: Link, statistics and more. 2023. 04. 25.
<https://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obesity-and-poverty>
- Żukiewicz-Sobczak, W., Wróblewska, P., Zwoliński, J., Chmielewska-Badora, J., Adamczuk, P., Krasowska, E., Zagórski, J., Oniszczyk, A., Piątek, J., & Silny, W., Obesity and poverty paradox in developed countries. Annals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 AAEM, 21(3), 590-594. 2014.
<https://doi.org/10.5604/12321966.1120608>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ext with EEA relevance), 2023.5.16.
<http://data.europa.eu/eli/reg/2023/956/oj>

한국 산란계 업주의 케이지프리 전환을 위한 팔로우업 연구조사



ISBN 979-11-972887-8-4 (PDF)